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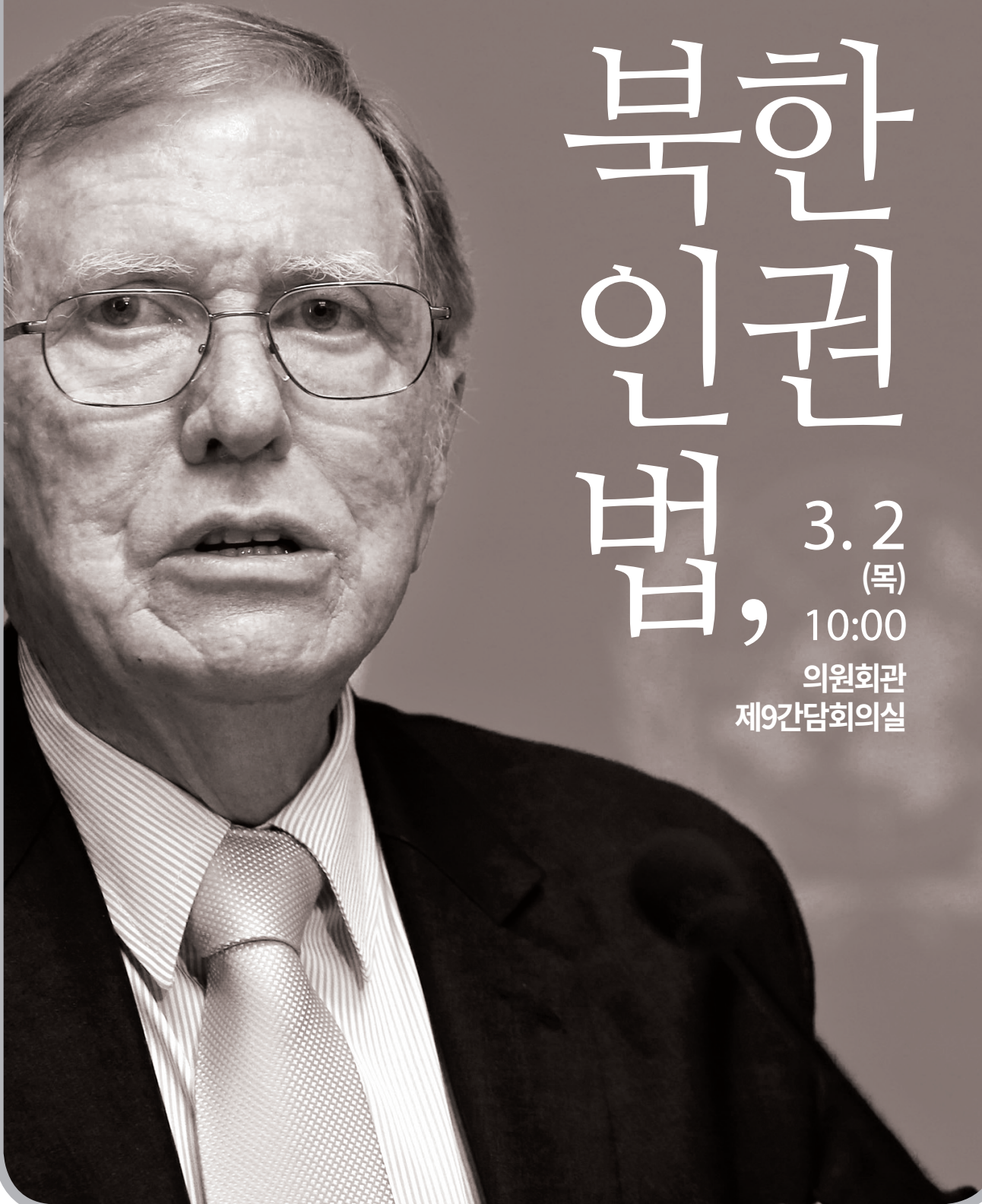
—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 북한 인권 법,

3. 2  
(목)

10: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 Contents

## 토론회 목차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 개회사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 (사)아시아인권의원연맹대표) .....	3
-------------------------------------	---

### 인사말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	5
--------------------------------------	---

### 축사

시나폴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	7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	9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	11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	13
대선후보자	

### 기조발제 \_ 북한 인권에 대한 행동

마이클 커비 (전 유엔COI 위원장 / 전 호주 대법관) .....	15
---------------------------------------	----

### 현황보고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31
-----------------------	----

### 토론

이재원 (변호사 /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39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45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49
안명철 (NK 위치 대표) .....	51

### 참고자료

❶ COI리포트 발췌문(한글) .....	56
❷ COI리포트 발췌문(영어) .....	66
❸ 북한인권법 .....	75
❹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북한인권법 번역본) .....	79
❺ 북한인권법 시행령 .....	85





안녕하십니까. 국회인권포럼 및 사단법인 아시아인권위원회연맹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바른정당 홍일표 의원입니다. 오늘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인권포럼은 1998년 인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설립된 올해로 19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한 국회의 대표적인 의원연구단체입니다.

국회인권포럼은 정책수립과 입법을 통해 국내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북한주민과 탈북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각 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토론회를 함께 주최하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대표이신 김태훈 변호사님은 북한 주민, 탈북자, 국군포로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법률적 증거 수집을 하는 등 북한인권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신 분입니다.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를 위해서 여러 시민단체를 규합하여 여론을 조성해 주시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주시며 북한인권법의 과거와 현재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러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규탄하는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듬해 10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발효되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공론화되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처음 이 법을 발의한지 11년 만인 2016년 3월 2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은 남북관계의 격랑 속에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17대, 18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여당은 북한 인권 관련 대북단체에 대한 지원과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유린 예방 및 처벌 등에 초점을 맞췄고, 야당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주민의 생존권·기본권 확보에 집중하며 협상이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에서도 통과가 불투명하다가 여야 간 쟁점들을 주고받으며 겨우 합의하여, 선거를 앞둔 임기 막바지에 겨우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명칭은 여당이 주장한 북한인권법으로,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야당의 주장대로 통일부에 설치하기로 하며 협상이 급진전 될 수 있었습니다. (인권기록센터의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로 이관하고,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 담당 기구를 두기로 하는 등의 부수적인 조치들도 합의되었습니다.)



**홍일표**  
국회인권포럼 /  
(사)아시아인권위원회연맹대표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적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목숨 걸고 북한인권을 위해 싸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여론,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이 어렵게 통과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설립을 규정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수행할 기구입니다. 하지만 이사 추천 문제에 대한 여야간의 갈등 때문에 이 기구는 아직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아직 법에서 정한 기구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정부 출범으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지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암살 등 북한은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탄핵과 대선을 앞두고 권력공백 상황을 맞고 있어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들이 빠르게 대처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인권탄압과 유린은 계속되고 있지만, 다른 문제들에 인권이란 가치가 부차적인 사안들로 미뤄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클커비 전 호주대법관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북한인권실태에 대한 UN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며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전환점을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기초발제를 통해 북한인권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해안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으로 북한인권에 대한 활동을 하고 계신 시나폴슨 소장과 11년 전 북한인권법을 처음 발의하신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님,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께서 참석해 주셔서 오늘의 토론회를 빛내주셨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이재원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안명철 NK워치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북한인권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한 소중한 논의의 시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첫돌이 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오늘을 기념하여 많은 내외 귀빈을 모신 가운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홍일표 의원님이 대표로 계신 국회인권포럼 및 아시아인권의원연맹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이나 끌었지만 여야 합의로 1표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고, 이로써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인권법의 통과로 대한민국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 증진을 북한에 구현하게 되었고, 북한인권 신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치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본격적인 자유민주주의에 기반 통일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북한인권법은 지난해 9월 4일부터 시행되어 북한인권기록센터, 북한인권대사,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 주요기관이 모두 출범하였지만 북한인권재단 만이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북한 인권의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의 개발 및 집행, 시민사회단체 지원,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의 중요 역할을 담당합니다. 당면 과제로 국제사회는 제네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에 있고, 특히 독립 전문가 그룹(group of independent experts on accountability)이 북한 반인도범죄자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고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준비를 비롯해 종합적인 대북 인권 정책의 마련이 시급한 형편에 있으므로 국회는 조속히 재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탄핵 정국을 맞아 온 나라가 쪼개질 것 같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우리 민주시민의 저력으로 능히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도덕적 위기는 이번 북한 김정남 독살 사건에서도 드러난 북한의 ‘인권 지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권은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것이고, 북한 인권은 2014년 2월 유엔 COI 보고서 이래 3년 연속 유엔총회와 안보리가 북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고 검토할 정도로 세계인 전체에게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북한정권의 교체(regime change)까지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통일을 시대사명으로 하는 우리 한국인에게 헌법상 국민인 2400만 북한 동포의 인권 개선만큼 중요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오늘의 토론회 자리가 그 동안의 북한인권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북한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금 참석해주신 여러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 North Korea Human Rights Act's Conference - 2 March 2017

신사 숙녀 여러분.

축사를 하기에 앞서 먼저 이번 회의를 주최하신 국회인권포럼,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그리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제가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이토록 중요한 회의에서 축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 이 회의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열렸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3일 전 월요일 제네바에서 제34차 인권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그랬듯이 올해도 북한의 인권실태가 의제로 제시될 것입니다. 이번엔 특별히 개별 전문가 집단의 보고서가 부록으로 포함 된 특별보고관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개별 전문가 집단의 보고서는 국가 내에서 인권 침해를 가한 자들, 특히 인류에 대한 범죄를 가한 자들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선택권들에 대해 개요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생각, 보고서, 법안 등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들은 좋은 시작점이지만 우리는 꼭 이들을 통해 행위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면에서 특별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점차 북한 인권 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과정 속에 있으며 이 법안을 통해 다양한 관련기관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주최 단체들을 축하하는 이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 자신들의 성과를 축하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일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 곳에서 멀지 않은 저 북녘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 여성분과 대화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분께서는 누군가가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인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가족 까지도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녀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북한의 인권 실태 개선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나폴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 North Korea Human Rights Act's Conference

2 March 2017

Ladies and Gentlemen,

Let me first congratulate the organizers, the KNA Human Rights Foundation, the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Coalition for Asian Human Rights and Lawyers for Human Rights and Unification of Korea. I am delighted to be delivering congratulatory remarks at this important conference o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This is indeed a timely conference. On Monday, three days ago,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pened the 34<sup>th</sup>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As in the past years,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ll once again be on the agenda.

Significantly, the Special Rapporteur will present his report, which contains as an annex a report by an independent expert group. The experts' report outlines options for accountability for those who commit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rticular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country.

This is important – but ideas, reports and even laws, are not enough. They are useful starting points, that we must turn this into action.

That is why this conference makes a particular contributi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howing increasing commitment to addressing the very serious repor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Republic implementat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is also underway, including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various institutions provided for in the Act.

Ladies and Gentlemen,

While I congratulate the organizers of this conference, there is still much work to be done before we can fully congratulate ourselves. Not far from here,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ontinue to face the many violations documented in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Recently, I spoke to a young lady who had made the journey to the Republic of Korea. She recounted in some detail the different types of punishments you and your family may face if you are perceived to lack loyalty to the regime. For her, and for so many others, we must continue to work towards the common goal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nk you



시나폴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 북한인권법을 무용지물로 만들면 북한인권도 독살될 것이다

북한인권법 국회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사를 주최하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훈 대표님, 국회인권포럼을 이끌고 계신 홍일표의원님, 마이클 커비(Michael Kirby) 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년 8월 제가 최초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을 때, 저는 솔직히 이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11년이나 걸릴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1년전, 국회가 마침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을 때,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는 단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이 발표된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야당이 이사 추천을 거부해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대사와 같은 기구와 조직은 제가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는 북한 인권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독재자 및 하수인들의 인권탄압 내용을 엄정히 기록하여, 나중에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자기 형, 김정남을 백주 대낮에 남의 나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UN이 금지한 화학무질, VX로 암살했습니다. 고모부 장성택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을 고사총으로 살해했습니다.

김태훈 변호사님이 이끌고 있는 <한변>의 자료를 보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 처형된 고위 간부는 2012년 3명으로 시작해서, 2013년 30여명, 작년에는 140명까지 급증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다섯번이나 핵실험을 했고, 수시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정권의 현주소는 희대의 살인마에 의한 폭정으로서, 세계평화의 암적 존재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짓밟고 있는 인권과 평화에 대한 대처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떠나 인류의 양심과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닌 우리 내부에 분노를 돌려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사사건건 북한 편을 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됐고, 국제적인 북핵공조를 위해 개성공단을 중단했습니다. 종북좌파 정당 통진당을 해



**김문수**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정은에게는 아무 일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저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반인권, 반인륜 살인정권의 수괴, 북한 김정은입니까?

인권은 남북평화나 화해 등 그 어떤 명분과 상황논리, 심지어 전쟁중이라도 침해해서 안되는 고귀하고 신성한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다른 사람도 아닌 북한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인권을 말하면 남북의 화해와 평화가 깨진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화해,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전쟁이 두려워서 인권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또 무슨 해괴한 논리입니까? 3대세습 독재와 2,400만 인민의 굶주림,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가혹한 현실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두둔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퇴보, 퇴행일 뿐입니다.

저는 북한인권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정당과 국경을 넘어서는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확산시켜 온 우방국들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통받고 좌절한 북한 주민들도 남한의 동포들이 그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인권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도덕 수준, 국격의 문제이자 양심적 인간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일입니다. 북한인권 상황에 눈을 감으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게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앞으로도 계속 무용지물로 만들면 김정남이 독살 당하듯이 북한주민과 북한인권도 독살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하늘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비롯한 북한인권법의 적극적인 시행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5년 10월, 저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기여한 공로로 과거 동독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독일 드레스덴 시민위원회가 수여하는 <드레스덴 인권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시절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은 바로 북한의 민주화와 남북통일이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북한인권 개선과 남북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장정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 회의를 준비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상임대표님, 국회인권포럼과 홍일표 의원님, 그리고 기조연설을 맡으신 마이클 커비 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3월 2일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지 11년 만에 국회는 북한 인권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인류역사에 유례없이 잔혹한 ‘김씨 왕조’의 인권 탄압에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뒤늦게나마 희망을 갖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 야당의 비협조가 법안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자체를 막고 있는 상황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작년 9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통일부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그리고 법무부에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NGO, 연구소 및 탈북자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은 북한인권재단은 구성조차 되지 못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기구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는 결국 이 법안의 책임자들이, 즉 국민을 대표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북한인권 유린을 좌시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결론은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커비 위원장은 일찍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은 반인도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반인도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문제를 난민, 테러, 핵무기에 버금가는 주요 글로벌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3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 문제는 어김없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전문가패널이 지난 6개월간 준비한 대북 책임추궁 보고서에 대한 관심도 상당합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유린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단 발족을 미루고 있는 우리 상황하고는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언 70년이 지난 지금 북한에서는 이 선언문의 30개 조항 모두가 일상적으로 위반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세계 최악의 인권국가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김정



**이정훈**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남 암살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유엔 인권 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 내용을 보다 더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상습적인 유엔결의 위반은 북한의 유엔회원국 ‘자격 박탈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아직도 대북 인권제재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할지도 모른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개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유린을 못 본체한다 해서 언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자제한 적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민족의 인권 유린에 침묵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발상입니다. 침묵은 분명 범죄에 대한 방조행위이기도 합니다. 국회는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가능케 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할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회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 드리고 평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북한 인권법 제정 1주년에 부쳐

「북한 인권법」은 작년 3월 3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9월4일에 시행되었다. 이는 법안이 발의된 지 11년 만에 이루어졌다.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은 북한 인권문제가 복합적이고 다 차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었다.

북한 인권법 제정 과정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인식차이와 법률제정 실효성에 관한 논란은 있었지만, 이 법을 제정하는 배경과 목적에는 상호 공감하였던 것이다.

우선, 북한 주민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실을 확인 공감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출 수 있는 수준의 국내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북한인권법은 국내정치나 국제정세의 상황변화에 따른 북한 인권정책및 제도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을 선도하는 인권선진국의 지위로

나아갈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인권보장은 남북통일추진과정 뿐만 아니라, 장차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임에 틀림없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의 긴급한 현안이자, 통일과업의 핵심과제임을 분명히 하였다.

장시간에 걸쳐 난산으로 출생된 북한인권법이지만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첫째 북한 인권법은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인권법이라 하겠지만 북한인권기록 관리 대상이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관련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향후 북한이탈주민, 국군포로, 납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까지 고려대상이 되도록 보완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의 인권침해 불법 청산의 국내적 국제적 노력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남북한 정치 갈등이나 동북아지역 긴장을 초래한다면 북한주민 인권상황 개선이나 평화 실현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 인권증진 기본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감시, 억제 측면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기록을 수집 보존과 함께 국제형사재판 절차를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내 친인권적 법제도 환경조성의 유도, 조력의 측면에서는 남북한 형법을 함께 국제 인권규범의 채택이행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북한 인권개선과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대북인권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대북 인권문제는 북한사람들의 사고와 가치를 고려하면서 ‘끈덕지게, 화내지 말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하면서 진행되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부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규약과 북한국내법을 기준으로 인권문제를 접근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적 교류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정부는 물론 민간단체도 역할을 분담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동북아를 비롯한 관련 국가들의 대북한 인권정책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고 북한의 대응책과 인권개선 조치 등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이들 국가들과 정책을 조율해 나가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개입이 그동안 다양하게 펼쳐졌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북한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을 체제안보적인 관점에서 만 처리했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기 보다는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인권개입을 수용하는 것이 북한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변화가 수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및 국제인권단체의 북한방문조사, 남북간 인권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및 국제인권단체의 북한방문조사, 남북간 인권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역량을 갖추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적 역량을 확보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관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구체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청사진을 마련하고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간 북한인권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신설된 인권관련 조직과 국내외의 인권기구, 민간단체등과 같은 조직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내외적으로 수집된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기조발제

## 마이클 커비

전 유엔COI 위원장 / 전 호주 대법관







## 기조발제

## 북한 인권에 대한 행동

The Hon. Michael Kirby AC CMG\*

## 첫 번째 맥락: 국제연합(UN)

국제연합헌장은 1945년 국제평화와 안보, 보편적 인권과 정의, 자기결정권과 경제적 공정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성립되었습니다.<sup>1)</sup> 본래 이 헌장은 권리장전을 포함하도록 계획 되었지만, 시간적 제한 때문에 대신 1948년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이의 없이 채택되었습니다.

1993년 한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을 때 두 나라는 각각 이러한 원칙 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각 국은 인권조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단계에서 북한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철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당사국은 자국의 행동과 국제법의 원칙에 구속되며 이에 따라 철폐를 위한 규정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원칙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총회에 책임을 지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를 포함하는 유엔 내 제도와 기구가 발전되었습니다.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을 임명하였습니다. 북한은 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인류에 대한 범죄와 대량학살을 포함한 인권침해 보고와 항의들에 대한 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 해야한다는 권고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OI 설립을 위한 투표는 유례없이 어떠한 국가의 이의제기도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판사직을 은퇴한 저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르주끼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특별보고관과 소냐 비세르코(Sonja Biserko) 위원과 함께 위원회 기간 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절차를 통해 의견이 합치된 하나의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아주 강력한 결의안들을 순차적으로 확보해냈고 나아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까지 촉진되도록 의제 설정에 기여했습니다.<sup>2)</sup> 인권과

\* Former Justice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1996-2009); former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6-8); chai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1) UN Charter 1945, Preamble

안보는 상호의존적입니다.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는 보통 불안정하고 주변국가뿐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위험합니다. 북한 역시 그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저의 COI 권한은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는 새로운 특별보고관 토마스 쿼타나(Tomas Quintana)를 임명하였고, 그의 주요 책임은 감시, 그리고 북한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을 향한 저의 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고통을 목격했습니다. 북한이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라는 말은 곧 그 폭력적 행위들이 인류의 자의식에 대한 모욕적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COI 는 그 책임성을 보고할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 COI의 보고서는 아주 강력하고 읽기 쉽게 쓰여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COI가 책임성에 대해 권고했던 사항 중 하나인 북한인권 상황(COI보고서에서도 말하듯이)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추론컨데 이러한 제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잠재적 거부권 행사로 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sup>3)</sup>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그리고 무기수출에 대한 제재를 위해 몇 차례의 강경한 결의안 채택해온 바 있습니다.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 2321호(이상 2016년)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입니다.<sup>4)</sup> 가장 최근에는 북한의 2017년 2월 11일 동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2월 13일, 안보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비난 성명을 발표하였고 이전 제재들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이 사건에 대해 “매우 불만족스러워하며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가장 최근 대북제재에 가입하고 남은 2017년의 기간동안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입 전면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 전체 수출량의 40% 가량을 삭감시켰습니다.<sup>5)</sup> 이러한 조치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두 번째 맥락: 한반도 내 전개상황

외부 관찰자(Observers)들은 한반도가 한국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분단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분단은 세계2차대

2) M.D. Kirby,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Council: Interface of Security and Human Rights" (2015 89 *Australian Law Journal* 714.

3) A/HRC/25/CRP.1

4) UN *Charter*, art 27.3.

5) Beech, "China's North Korea Problem", *The New Yorker*, February 23, 2017.

전이 성공적인 끝을 향해 달려가던 시점에서 연합국들에 의해 강요된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패배와 항복 이후 외부자들에 의해 최종 결정 된 것입니다. 이는 냉전의 작품이자 냉전을 대표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역사적 타임캡슐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비무장지대로 나뉘어진 양국 시민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들은 통일을 갈망합니다.

두 국가 모두 통일을 이루기 위해 공식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간절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전쟁(1950-1953)은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으로 끝났습니다. 6자 회담은 중지 되었고 양국의 적대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민족에 대한 위협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북한군의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 안보리 결의안과 반대로 북한이 최근까지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점
-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미사일 체제(SLBM 포함)의 발전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 첩보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김정남 살인 사건은 첩보원을 일본 등의 타국에 잠입시켜범죄 행위를 자행하던 북한의 과거 행태가 부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sup>6)</sup> 실제로 2002년 COI 보고서(#924)의 내용에도 나와있듯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일본 고이즈미 총리에게북한이 13명의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였습니다. 북한은 이들을 강제로 납치한 것입니다. 김정일은 이에 대해 사과하였습니다. 그는 비정상적인 쌍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유감스러운 사건들이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과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 북한 당국은 모든 납치와 실종에 대한 의혹을 부인하였습니다.

김정남 사건은 부분적으로 일본인 납치사건들 (#924), 그리고 2013년 12월 현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당한 사건과 유사합니다.<sup>7)</sup> 특히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른 UN 회원국들의 영토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제사회일원의 행동으로 보입니다.<sup>8)</sup> 이런 무법자들과 같은 행위는 국제법과 국내법을 통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 세 번째 맥락: 북한인권법 제정

이러한 위험하고 불안감을 주는 상황들은 국제 수준의 여러가지 변화들 때문에 더욱 악화되

6) COI report, page 43, para 157.

7) COI report, page 43, para 157.

8) Many other such incidents are recorded in the COI report, including the incident in 1983 in Rangoon (Yangon) Burma (Myanmar) where a bomb attack killed 17 ROK officials.

고 있습니다.<sup>9)</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상황들의 발달은 대한민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와 UNHRC의 결의안, 그리고 그에 대한 대한민국의 동의에 의거하여 북한인권법에 대한 COI 조사를 지속할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개설되었습니다. 현장 사무소와 사무장인 Signe Paulsen의 성과에 제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은 기존 COI가 지닌 역할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지속적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와 인류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사무소는 이러한 일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 임명된 특별보고관 또한 북한에게 관계 개선과 협조의 모습으로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장 고무적인 것은 수 년간의 토의 끝에 2016년 3월 2일 대한민국 국회가 비로소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인권법은 단 한 개의 반대표도 없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 이러한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인권은 당파적인 정치적 반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협력과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다른 조치들 또한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2016년 9월 4일에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되었고 2016년 9월 28일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2016년 10월에는 북한인권대사(이정훈 대사)가 임명되고 2017년 1월에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가 설립되어 그 직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법과 정책의 융합에 있어 핵심적인 재료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은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인권법의 구성에 포함되어 있는 이 재단의 구성원들을 하루 빨리 임명하기를 바랍니다. COI에 의해 드러난 심각한 상황은 이러한 동의와 의견 일치들이 하루 빨리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COI 보고서 (#COI, para 1225(f))는 아래와 같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유엔인권이사회(HRC)는 반드시 이사회의 판단과 권고사항들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으로부터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자행되었고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그 곳에 대한 행동은 국제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이 구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대표 기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COI 보고서가 밝

9) Prince Zeid Ra'ad Al Hussein (UN HCHR), address at US Institute of Peace,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USA, February 16, 2017.

히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보이는 기존의 인권 침해에 대한 목록 정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보고서(COI, #1211)는 북한이 특수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며 잔혹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지도부와 그 기관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고 지금도 자행되고 있다. 많은 경우 이러한 인권 침해 현상은 인류에 대한 범죄의 구성을 띤다. 이는 단순한 정부의 과잉 대응이 아니다. 인권 침해는 북한 정권이 말하는 정당성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그 정치 체제의 핵심적 요소다. 북한 인권침해의 심각성,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세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수준이다.”

물론 강력한 정치적 의견 불일치 현상이 건강한 민주정치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잔혹하게 다양한 강도와 기간을 거쳐 형성된 인권 침해 현상 앞에서 인류는 정치를 뛰어넘어 그 피해자들을 위한 해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또한 인류는 그 지속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류는 그에 대한 적절한 책임성을 보장 해야합니다.

## 결론: COI 보고서 이후

COI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인권 침해들에 대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사상, 표현,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
- 국가가 지정한 사회적 계급(성분)에 따른 차별
- 이주와 거주에 대한 침해
- 식량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침해
- 임의적인 구금, 고문, 처형, 강제 실종,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
- 타국에서 납치를 통해 사람을 강제 실종시키는 행위
- 신앙심, 난민, 여성, 그리고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

또 COI는 북한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국제 언론들마저도 다루지 않고 있는 다양한 권고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 북한 현지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한 독립언론의 입국 허용 (COI 보고서 #1225(e))
- 인권 교육 개설패와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 (COI 보고서 #1225(f))
- 납치된 자들에 대한 가족 상봉 허용 (COI 보고서 #1225(n),(o))
- 인권 침해에 대한 국민주도적 진실 규명 과정 개설 (COI 보고서 #1220(p))

- 적십자를 포함한 시민사회 단체들과 교류 증진 전문가 단체와 여성 단체들과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발전과 궁극적으로 이동망과 통신망 형성 (COI 보고서 #1222)
- 문화, 과학, 체육, 좋은 거버넌스, 그리고 경제적 발전 부분에서의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 (COI 보고서 #1223)
- 비즈니스 상호작용 증가와 화해, 남북대화, 친선체육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접촉 방법들에 대한 발전 추구 (COI 보고서 #1222)
- 역사적으로 북한에 호의적인 국가들과 함께 UN 내 접촉그룹 형성 (COI 보고서 #1225(h))
- 식량 제공과 인도주의적 지원과 그 지원에 대한 보호 (COI 보고서 #1225(i))
- 남한과 북한 모두 UN헌장과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엄숙히 지키도록 하여 한국전쟁에 대한 최종적인 평화적 합의를 논하는 고위급 정치인들 간의 회의 소집 (COI 보고서 #1225(j))

화해와 평화는 아주 시급하고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의제입니다. 이는 한민족 모두의 마음에 새겨진 염원입니다. 그래서 꼭 진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제를 위해서 보고서에 명시된 더 큰 잘못들과 관련된 책임성에 대한 필요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잘못들이 여전히 언급 되거나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기에 우리는 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6년 UN 인권이사회는 책임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전문위원회를 개설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2017년 3월 제네바에서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게 COI 보고서의 내용에 주의해주시기를 정중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증인들의 목소리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공청회 녹음 자료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계의 그 어떤 사람이든 이 공청회 자료를 열람하고 자신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였고 우리의 정의, 인권, 그리고 공지에 대한 감각에 호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또한 이 목소리들에 대해 반응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폭력의 종결과 인권 존중은 한반도의 궁극적 화해와 통일을 위한 진정한 기반입니다. 저는 꼭 저의 남은 생애 속에서 보편적 인권의 기반에서 이루어지는 그 화해와 통일을 직접 목격하기를 소원합니다.

## 기조발제(영문)

## AC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Hon. Michael Kirby AC CMG\*

## FIRST CONTEXT: THE UNITED NATION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1945, established an organisation based on three principles:

1.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2. Universal human rights and justice; and
3. Justice, social progress and larger freedoms.<sup>1)</sup>

Originally, the *Charter* was intended to contain a Bill of Rights. Time ran out and, instea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was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without dissent, in December 1948. When the two Korean states joined the Organisation in 1993, they each signed up to these principles. Each of them ratified human rights treaties. Then, at a later stage, wh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sought to withdraw from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it was told (and accepted) that there was no provision for withdrawal. By its own action and by international law it is bound by these principles.

To ensure that such principles were carried out, institutions and machinery have evolved in the United Nations. They include the Human Rights Council (HRC), answerable to the General Assembly. That Council established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in DPRK (SR). It was the failure of North Korea to admit the SR or to cooperate with him or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of Human Rights that led to the

\* Former Justice of the High Court of Australia (1996-2009); former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1996-8); chair of the UN Human Rights Council'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3-14).

1) UN *Charter* 1945, Preamble.



recommendation that a Commission of Inquiry (COI) be established to investigate reports and complai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crimes against humanity and genocide.

Uniquely, when the vote was taken to create the COI, no country voiced dissent. I, a retired judge from Australia was appointed chair of the COI. The SR (Marzuki Darusman) and a third member (Sonja Biserko) and I produced a unanimous report within time, within budget and by transparent and accountable procedures. That report successively secured extremely strong supporting resolutions on the HRC and the General Assembly. It even stimulated the resolution of the Security Council, placing the issues on the agenda of that body.<sup>2)</sup> Human rights and security are interdependent. Countries that do not uphold the human rights of those that were there are commonly destabilising and dangerous to themselves and their neighbours. So it has proved with DPRK.

My mandate in the COI has concluded. However, a new SR has been appointed by the HRC (Tómas Quintana). His is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monitoring and seeking to improve the situation in DPRK. But my commitment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continues. I am a witness to their suffering. The defini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which were recorded against DPRK) is that the acts of violence involved affront of the conscience of humanity. They therefore demand accountability. The COI was obliged to report on accountability and it did so. Its report is powerful and readable.

So far, the Security Council of the United Nations has not considered one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I on accountability, urging that the circumstance of DPRK (as disclosed in the COI report) should be referred for consideration to a prosecutor of the already established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t The Hague, Netherlands. Inferentially, a potential veto by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has restrained presentation of a proposed motion and consideration of this proposal. <sup>3)</sup>

The Security Council (SC) has adopted a series of strong resolutions imposing sanctions on DPRK for its ballistic missile tests and nuclear weapons tests and delivery systems. These

2) M.D. Kirby,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North Korea and the Security Council: Interface of Security and Human Rights" (2015 89 *Australian Law Journal* 714.

3) A/HRC/25/CRP.1

SC resolutions of 2006 (#1718), 2009 (#1874), 2013 (#2087), 2013 (#2094), 2016 (#2270) and 2016 (#2321) imposed sanctions with the concurrence, as required by the *Charter*, of the five permanent members.<sup>4)</sup> Most recently, on February 13, 2017, following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to the Sea of Japan on February 11, 2017 the SC resolved in terms of its strongest condemnation. It strengthened the requirements for enforcement of its earlier decisions. According to well sourced reports, China is "deeply frustrated and wants to do something". By joining in the most recent SC sanctions and condemnation and by suspending all imports of North Korean coal for the rest of 2017, China has cut by approximately 40% the total exports of that country.<sup>5)</sup> This indicates the seriousness with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ddressing the security situation in North Korea.

## SECOND CONTEXT KOREAN DEVELOPMENTS

Foreign observers must never forget that Korean Peninsula was never divided by decision of the Korean peopl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was never respected. The division was imposed by the increasingly successful allies, as the Second World War moved to its conclusion. It was ultimately effected by outsiders, following the defeat and surrender of Japan. It was a product, and became a symbol, of the Cold War. It represents a type of historical time capsule. It is an affront to the people of Korea on both sides of the DMZ. They yearn for reunification.

Formally, both Korean states are committed on both sides of the DMZ to reunification. The Korean people yearn for it. However, that achievement seems a long way off. The Korean War (1950-53) was concluded in an armistice, not a peace treaty. The Six Party Talks to follow that armistice are stalled. Animosity between the two parts of Korea has increased. The dangers for the Korean people appear to be increasing. They arise out of:

- \* The establishment by DPRK of one of the largest standing national armies in the world;
- \* The recent conduct of nuclear weapons tests contrary to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 \* The development of missile systems (including submarine launch missiles) that endanger

4) UN *Charter*, art 27.3.

5) H. Beech, "China's North Korea Problem", *The New Yorker*, February 23, 2017.

the Peninsula and its neighbours.

The reported murder by exposure to the nerve agent VX in Kuala Lumpur, Malaysia, of Kim Jong-nam, half-brother of the Supreme Leader of DPRK,<sup>6)</sup> by operatives of DPRK on February 13, 2017 is an apparent indication of a revival of a past practice of DPRK in sending agents to other countries (particularly Japan) to perform criminal acts in those other states. As the COI report explained (#924), in 2002 the then Supreme Leader of DPRK, Kim Jong-il admitted to Japan's Prime Minister Koizumi that DPRK agents had abducted 13 Japanese nationals. They forcefully kidnapped them. An apology was offered in 2002 by Kim Jong-il. An assurance was given that "These regrettable incidents that took place under the abnormal bilateral relationship would never happen in the future". Prior to this admission, DPRK had denied all allegations connected with disappeared persons and abductions.

The incident involving Kim Jong-nam is, in part, similar to the abductions of Japanese nationals (#924) and in part similar to the humiliating public arrest of another family member of the present Supreme Leader, his uncle by marriage, Jang Song-thaek in December 2013.<sup>7)</sup> In particular, the apparent acts in Malaysia appear to be the actions of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does not respect the rights of other UN member countries in their own territory.<sup>8)</sup> These should be accountable for such apparent lawlessness under international and national law.

### THIRD CONTEXT: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se dangerous and disturbing developments are made the more worrying by other changes that have happened at an international level.<sup>9)</sup> Nevertheless, some developments have occurred which constitute positive steps affecting the Republic of Korea (ROK) (South Korea).

In accordance with a recommendation of the COI and pursuant to a resolution of the UNHRC

6) COI report, page 43, para 157.

7) COI report, page 43, para 157.

8) Many other such incidents are recorded in the COI report, including the incident in 1983 in Rangoon (Yangon) Burma (Myanmar) where a bomb attack killed 17 ROK officials.

9) Prince Zeid Ra'ad Al Hussein (UN HCHR), address at US Institute of Peace, Georgetown University, Washington, USA, February 16, 2017.

and concurrence of ROK, a field office has been established in Seoul to continue the work of the COI on human rights in DPRK (#1225(b) and (c)). I honour the work being performed by the field office and its Director, Signe Poulsen. It extends and expands the earlier work of the COI. It continues the task of gathering testimony of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t should continue to do this as accurately and impartially as is possible.

Additionally, a new SR has been appointed and has taken up his duties, seeking to reach out to DPRK to explore as far as possible, positive attitudes to engagement and cooperation.

Most importantly, the ROK National Assembly, on March 2, 2016 enact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after many years of deliberation. In the end, there was not a single objection to the adoption of th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I honour and praise the National Assembly for taking this initiative. Human rights ought not be the subject of partisan political disagreement. It ought to be a matter upon which a high degree of cooperation and engagement can be achieved.

Other steps have been taken in harmony with this development. On September 4, 2016, the Act was brought into effect. On September 28, 2016, the 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was established. In October 2016, the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Ambassador Lee Jung-hoon) was appointed. And in January 2017,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was established to commence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One of the chief ingredients in this mixture of law and policy,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has not yet been formed. I would hope that appointments of members of the Foundation, as envisaged by the Act, could be achieved without undue delay. The dire situation revealed by the COI report and by subsequent developments is such that an agreement should be forthcoming.

In the COI report, concern was expressed (#COI, para 1225(f)) that:

“The [HRC] should ensure that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do not pass from the activ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so much suffering has occurred, and is still occurring, action is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These words apply equally to the Korean people and to their representative institutions. What the COI report revealed was not a list of standard or common human rights abuses, frequent in autocratic countries. Instead (COI, #1211). The COI concluded that North Korea was exceptional: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DPRK], its institutions and officials. In many instances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They are not mere excesses of the state. They are essential components of a political system that has moved far from the ideals on which it claims to be founded.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Whilst strongly held political disagreements are healthy and the essence of democratic governance, where such grave violations, of such variety, intensity and duration appear established, human beings should come together above politics to provide responses to those affected. They should, so far as possible, work to prevent the continuance. They should secure appropriate accountability.

#### CONCLUSION: FOLLOW UP TO COI REPORT

The categori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counted in the report of the COI call out for action on:

- \* Violations of the freedoms of thought, expression and religion;
- \*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tate-assigned social class (*songbun*);
- \* Violations of freedom of movement and residence;
- \* Violations of the right to food and the related aspects of the right to life;
- \* Arbitrary detention, torture, executions, enforced disappearance and political prison camps;
- \* Enforced disappearance of persons from other countries through abduction; and

- \*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against religious beliefs, refugees, women and minorities.

The COI made many recommendations that have not been seriously considered and certainly not taken up by DPRK. Nor have many of them even been covered in the international media. These include:

- \* The need to permit independent media to have access to DPRK to see and report accurately conditions on the ground (COI report #1225(e))
- \* The introduction by DPRK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that purpose (COI report #1225(f));
- \* Steps taken by DPRK to allow meetings of abducted families (COI report #1225(n), (o))
- \* Launch of a people-driven process to establish the truth about continuing violations (COI report #1220(p));
- \* Improvement in exchanges between civil society organisations including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contacts between professional organisations and women's groups; development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and eventually the establishment of modern transport and communication links (COI report #1222);
- \* Improvement in culture, science, sports, good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with improved links between North and South (COI report #1223);
- \* Development of business interactions and an agenda for reconciliation, inter-Korean dialogue, friendly sporting events and other contacts (COI report #1222);
- \* Creation of a contact group in the United Nations of countries with historic friendly ties with DPRK to promote engagement (COI report #1225(h));
- \* Provision of food and essential humanitarian assistance and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that aid (COI report #1225(i));
- \* Convening of a high level political conference to consider the final peaceful settlement to the Korean War that commits the parties to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COI report #1225(j)).

An agenda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is an urgent priority. It is written on the hearts of most Korean people on both sides of the border. It must be advanced. Yet it cannot ignore

the need for accountability for the great wrongs collected in the COI report. They remain unaddressed and unresolved. We cannot ignore them. That is why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2016 created a Committee of Experts to follow up on the issue of accountability. It will report to the HRC in Geneva in March 2017.

I most respectfully encourag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o attend to the report of the COI. The voices of our witnesses are available online in the recordings of our public hearings. People every where on our planet can view those hearings. They can reach their own conclusions. Those who have suffered call out to us. They appeal to our sense of justice, human rights and respect for the dignity of all. I hope that the National Assembly of ROK will find ways to respond effectively to these voices.

An end to violence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re the true foundation for the ultimate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 hope that I will live to witness such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n the foundation of universal human rights.



현황보고

서두현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현황보고

##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황과 향후 운영방향

서두현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1.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임무와 기능

- 핵심 임무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  
(북한인권법 제13조 제1항)
- 주요 기능은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관련 사항 수행,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연구·보존·발간 업무 등 수행(북한인권법 제13조 제2항)
  - 북한인권자료 공개정책 수립, 북한인권실태조사 관련 국내외 기관·단체와 협력 등(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조 제4항)
- \* 수집·기록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

## 2. 북한인권기록센터 설립 추진 경과

- 「북한인권법」 시행(’16.9.4)에 즈음하여 ’16.9.28 북한인권기록센터 개소
-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착실히 준비
  - 관계부처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실태조사 추진방안을 확정(’16.12), 조사관 충원 및 UN인권서울사무소 등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실시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설문지 작성, 예비조사(11월), 전수 시범조사(12월)를 통한 보완 등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충실히 점검
- ‘17년 1월부터 공식적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시작
  - 5개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 조사자문단」을 가동(1.11), 조사 효율성·전문성 제고 및 피조사자 인권보호 등에 만전

### 3. 북한인권 실태조사 현황

#### 가. 개요

- 조사 목표 : 정부 차원의 신뢰도 높은 북한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
- 조사내용 : 전반적 북한인권 실태 파악과 구체적 인권 침해사례 수집·기록
- 기대효과 : 북한주민 인권침해의 직간접적 방지를 통한 북한인권 상황의 개선
  - △적실성 있는 북한인권 정책수립 △향후 형사소추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 제고 △국제사회의 책임규명 및 통일과정에서의 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구현 등에 활용

#### 나. 실태조사 현황

- 조사 대상은 매년 새롭게 입국하는 탈북민 전수
  -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부모 동반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노인, △해외 장기체류 등 정확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대상은 제외
  - 특별보호대상자 및 ‘북한인권침해 신고 상담전화’ 운영을 통해 사회진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와 국내외 문헌조사 병행 추진
- 조사 장소는 하나원, 입소 초기 1주일간 집중 실시
  - 성별에 따라 조사장소 분리(여성 : 안성 본원, 남성 : 화천 본원), 同性의 조사관이 조사하는 등 2차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노력 병행
  - \*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나원 내에 별도의 상담실을 마련
- 설문지 구성은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북한이 당사국으로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과 ICC 로마규정 등을 참고하여 설계(UN인권서울사무소, 전문가 등 자문)
  - △탈북민 인권의식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인권실태 등 분야별로 항목 구성
- 조사 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1 면접 형식으로 진행
  - 설문지를 활용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진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 법정양식에 따른 문답서와 진술서 등을 작성
  -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의 트라우마 해소 등을 위한 심리안정서비스 조기 제공
  - \* 피조사자의 동의시 진술내용의 녹음 및 필요시 주요 가해자의 몽타주 작성

- 인권조사 관련 국제기준에 따라 조사 매뉴얼을 마련, 동일한 절차로 진행
  - 조사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초한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 확보
  - 조사관의 정기적 교육을 통한 역량 배양 및 심리소진 예방 병행
- \* UN인권서울사무소와 협조, '17. 2.23~24 양일간 조사관 대상 역량강화 교육 시행

#### 다. 추진 실적 및 계획

- '17.1.9.부터 공식적인 '북한인권 실태조사'에 착수, 지난 2개월간 총 178명(여성 133명, 남성 45명)에 대한 조사 완료
- 조사 기록은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거쳐 법무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4월 중순 원본 이관, 향후 형사소추 등을 위한 보존·관리

#### 〈참고 : 전수 시범조사 결과〉

- 기간 / 장소 : '16.12.12(월)~22(목) / 하나원
- 대상 : 하나원 입소 교육생 116명(여성 93명, 남성 23명)
- 피조사자 현황
  - 탈북년도 : 16년 18%, 11~15년 41%, 06~10년 27% 등
  - 출신지 : 양강 35%, 함북 29%, 함남 7%, 평양 7%, 평북 6%, 평남 5% 등
  - 직업 : 노동자 37%, 전업주부 16%, 군인 13%, 농민 7% 등
- 인권침해 사례조사 결과
  - 응답자 : 116명중 67명이 구체적 사례 130건 증언(문답서 작성)
  - 유 형 : 직접 경험 50%, 목격 38.5%, 득문 11.5%
  - 분 야 : 강제복송 과정에서의 폭행 및 가혹행위, 구금시설 및 조사과정에서의 폭행, 공개처형, 아사, 실종, 관리소 현황 등 포함
- 피조사자 반응
  - 同性(여성-여성, 남성-남성)의 조사관이 상담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데 대해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 등 대체로 조사에 적극 협조

#### 4. 북한인권기록센터 향후 운영 방향

-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민 대상 북한인권 실태조사의 체계적 실시를 통한 기록의 질적 향상 도모
  - 조사기록의 법률적 검토 및 진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강화 등
- 조사결과를 연례보고서 및 주요 침해사례보고서 발간 형식 등을 통해 공개 및 공유
  - 북한인권실태보고회를 개최, 북한인권상황 관련 국내외의 인식 제고
  - 보고서는 영문 등으로도 작성,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제사회 및 민간과 공유
- 북한인권 상황의 종합적 파악·활용을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 설계·구축
  - 고도의 정보보안조치를 통한 데이터 보안에 만전
  - 조사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입력 및 검색 활용의 용의성을 극대화

\* 표준화된 기록용어 체계(Tagging Convention 등)를 마련, 관계 기관 및 민간활용 권고
- 국내외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북한인권조사자문단, 북한인권 원탁회의 등과 의견수렴 활성화
  - UN인권서울사무소, 북한인권재단, 연구기관,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 확대

## 토론

### 이재원

변호사 /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안명철

NK 워치 대표







## 토 론

## 북한인권법의 장래를 위한 제언

이재원 (변호사 / 대한변협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1. 북한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의의

김정남이 2017. 2. 13.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한공작원들에 의하여 살해당한 사건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얼마나 야수적인 독재권력의 발밑에 던져져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인권상황이 이처럼 세계최악이고 우리가 이러한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의 수많은 희생자와 피를 나눈 형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례없는 폐쇄사회이긴 하나 넓고도 많은 여러 곳에서 시도 때도 없이 일상으로 저지르는 인권유린 범죄를 완벽하게 은폐할 수는 없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2014. 2. 17. 마침내 ‘북한정권이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반(反)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김문수 의원이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북한인권법이 11년씩이나 표류하다가 미흡한 내용이나 19대 국회 임기를 한 달 남겨둔 2016. 3. 2.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동포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의 최종책임자가 북한정권임을 전세계에 공개적으로 지목한 위 COI 조사보고서의 영향도 컸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만들어진 북한인권법은,

가.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제도화, 체계화, 활성화하고,

나. 북한인권 개선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조성할 현실적인 수단을 강구하며,

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려는 노력에 국가와 국민의 법적 의무로서의 규범성과 일관성, 지속성, 질서를 부여하고,

라. 대북정책이 북한인권의 개선을 목표로 수립되고, 민족통일 또한 북한동포에게도 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대북정책, 통일정책에 인권개념을 도입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 마. 따라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괴리, 원칙과 방법론에 관한 논란을 정리할 계기를 마련하고, 통일정책에서 인권을 도외시하는 용공적 통일방안을 제거하며,
- 바.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반인도범죄를 중지하고 인권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경고를, 핍박받는 북한동포들에게는 대한민국이 그들을 인권유린의 지옥으로부터 반드시 구출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1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자 북한인권을 걱정하던 많은 국민들은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튼튼하고 항구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으니 보다 힘찬 여러 갈래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전개될 것이며, 이 법이 지원하는 다양한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통하거나 이 법의 존재 자체로써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위축시키고 북한인권운동가들과 북한동포들의 인권투쟁을 격려하여 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운동의 성과를 보여주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은, 2016. 9. 4. 시행령이 마련되고, 2016. 9. 28.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6. 10. 10.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각 설치되고, 2017. 1. 25.에는 여야 동수로 위원이 추천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의 핵심기관인 북한인권재단 발족을 위한 재단이사 추천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빠져 있다.

## 2. 시급한 문제 – 북한인권법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상황은 그렇게 아무 것도 안 하고 만들어 놓은 법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무한정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sup>1)</sup>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의 상근이사를 민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할 것을 주장하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인권법 제11조는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토론자가 만나본 2015년 6월 탈북한 이\*\*호는 평안남도 개천 1호 교화소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기간에 수용자 1,500명 가량이 영양실조와 이에 따른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죄수인 위생조장을 시켜서 덜 죽은 허약자를 발로 밟아서 죽게 한 뒤 근처 골짜기에 버리게 한 일도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되었던 리\*\*은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하루 최대 24명이 사망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2015 대한변협 북한인권 실태조사에서도 전거리교화소에 2010년 6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수감되었다가 2013년 탈북한 한 여성 탈북자는 입소당시 남자 죄수 1800명, 여자 죄수 12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80%가 북한을 탈출했다가 잡혀온 사람들이었고, 2010년 7월 및 8월 경 매일 여자 죄수만 3-4명씩 영양실조 및 열병으로 죽었고, 그 이후에도 여자 죄수만 평균 2-3일에 1명씩 죽었으며, 남자 죄수는 그 이상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0년 10월경부터 2014년 12월경 사이에 제1교화소(개천 교화소)에 수감되어 위생원 견습생으로 일하며 통계자료를 보았다는 한 탈북자(2015년 탈북)는 2009년 10월경부터 2010년 12월경 사이에 남녀 죄수 3,000명 중 1,500명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규모는 적을 지라도 영양실조로 대량 사망자가 발생하여 2014년 출소 시에도 최소한 1년에 100명 이상은 죽었다고 진술하였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북한인권재단이 최종적으로 통일부장관의 책임 하에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법 제12조는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의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는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재단의 국회 추천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정당이나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통일부장관에게 추천하는 단계까지만 관여할 수 있고, 추천이 완료된 이후 누구를 재단 이사장으로 선출하며 누구를 상근이사로 임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로지 재단이사회의 자율과 통일부장관의 권한에 맡겨져 있음이 법문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상근이사를 사실상 자신들이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보듯이 정치로써 인권을 오염시키는 위험천만한 일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인권법은 통일부장관에게 재단이사 2명의 추천권을 부여하여 집권당의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인사가 12명 중 7명의 다수를 형성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단에서 통일부장관 지도·감독에 상응하여 재단업무를 관장할 상근이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로 임명하자는 것은 재단운영에 갈등과 충돌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재단이 다룰 북한인권 현안에 관한 의견이 6 대 6으로 갈리게 할 수도 있어 재단을 마비상태로 몰아갈 위험이 크고, 정부출연 재단의 상근이사가 대개는 주무부처의 담당 간부로 임명되고 있는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sup>2)</sup> 여야 합의로 제정한 북한인권법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을 납득시킬 수 없고, 책임정치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황당한 주장이다.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고 난 뒤에도 야당에 상근이사를 양보할 것임

2) 북한인권법 제12조 제3항 단서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현행법 위반의 문제는 여전히 치유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추천 인사가 반드시 상근이사가 되어야 한다거나 재단이사 중 6명이 야당추천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였고 지금도 그렇다면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조문에 이를 명시하였어야 마땅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면 일단 법 시행에 협조한 뒤 북한인권법의 개정안을 내는 것이 떳떳한 일이지 만들어진 명문의 규정과 법의 취지에 저촉되는 주장을 하면서 법 시행을 방해함은 공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만약 위와 같은 위법적 주장을 하는 목적이 재단운영에 있어 자기 당의 의사를 최대한 관철시키려는 정도에 있지 않고 나아가 시간을 끌다가 자신들이 집권당이 된 이후 7명의 다수 이사를 추천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이 또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막무가내의 이유로 정당한 법 시행이 방해받아도 무방하다면 이것이 아주 나쁜 선택이 되어 어느 정당이든지 집권당이 될 때까지 무한정 재단이사 추천을 거부하였다가 집권당이 된 후 재단이사를 추천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집권당이 바뀐다 한들 다시 야당이 된 정당이 재단이사 추천을 거부하는 악순환에 빠져 북한인권법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루도 발휘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북한인권법이 제대로 구실을 하자면 관계자 누구든지 인권문제는 인권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하고 정치적인 타산에 매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북한인권법의 제정에는 어쩌다 보니 합의하였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이 못내 마땅치 않다면 법 폐지안을 발의함이 정도일 것이다. 낡은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동포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북한인권법의 시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북한인권법의 명문규정과 입법취지에도 어긋나며 결과적으로 죄 없는 생명들을 사지에 방치하면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자를 돕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

### 3. 장기적 과제 – 북한인권법의 개정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제대로 시행도 안 되고 있는 법을 고치자고 말하기가 거북스러운 면이 있지만, 북한인권법은 성격과 내용에서 판이하게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 또한 현격한 거리가 있는 여야의 법안을 혼합 절충하여 입법하였기 때문에 체계상의 문제점도 있고 필요한 수단을 빠뜨린 점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다음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현행 북한인권법의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인권법이 아니라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원법 규정이므로 법체계상 인권법의 범주에 두기 어렵다. 게다가 북한인권법이 예정

하고 있는 인도적 지원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므로 북한인권법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북한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한 규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북한인권법의 해당 조문들을 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삽입하는 개정을 하면 족할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동포들의 정보접근권을 충족시킬 근거규정을 두지 않은 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교육, 대국민홍보대책이 없는 점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동포들이 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이로써 다른 인권의 증진을 선도하며 통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므로 반드시 북한인권법에 알 권리를 고양할 수단이 규정되어야 한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말했듯이 북한동포들의 인권은 김정은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의 인권유린 레짐(regime)은 ‘폭력’과 ‘거짓말’이라는 두 기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북한정권의 폭력수단을 제거하는 데는 전쟁의 위험이 수반될 수 있지만 북한동포들을 북한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북한의 인권탄압체제는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빠라와 전파는 북한동포들을 북한 독재자의 거짓 선전·선동으로부터 구제하고 인권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다. 북한동포들은 새롭고 정직한 정보에 목말라하고 있으므로 빠라든 방송전파든 기회가 닿는 대로 북한으로 많이 보내는 것이 북한동포들에게 정보접근권을 확보해주는 일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인권의식을 일깨워 북한의 인권상황을 제대로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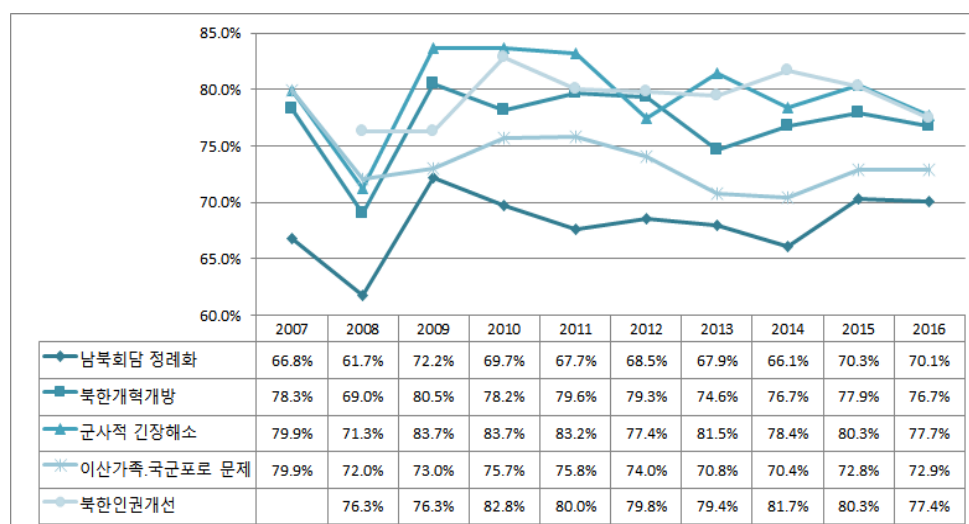
## 토론

## 북한인권법 통과 1주년 기념 토론회 토론문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1. 북한주민 인권개선 문제는 대북정책 핵심 의제로 고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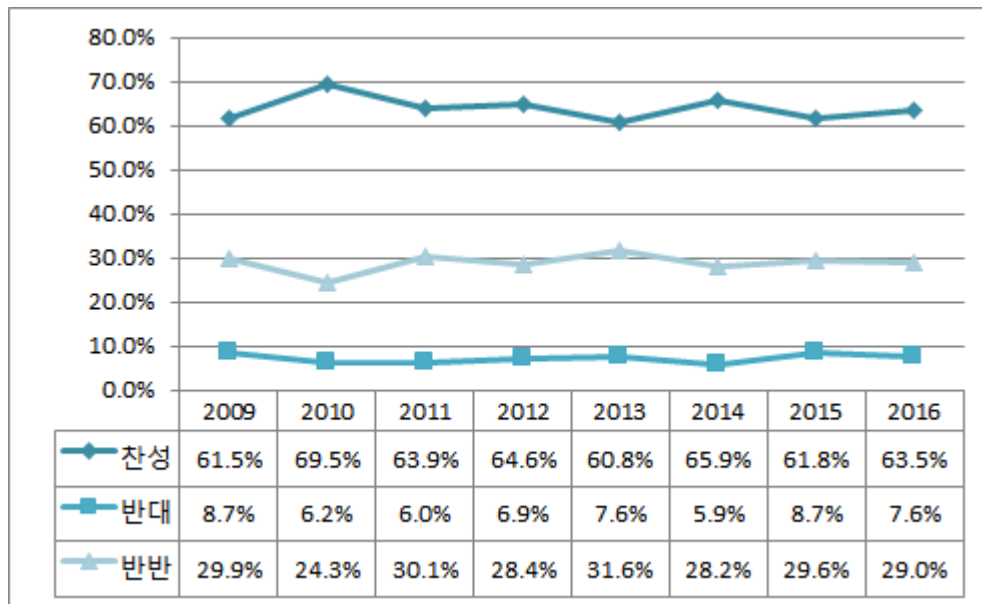
- 인권문제를 도외시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나 국내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 국제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
  - 특히 최근 김정남 암살 사건을 계기로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과 인권유린에 대한 관심이 새삼 증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북압박도 가중
-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여론이 상당히 공고하게 형성된 상태
  - 통일을 위해 북한인권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lt;그림 1&gt; 통일을 위한 시급성

-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도 조사가 시작된 2009년 이후 줄곧 60%를 상회하고 있는 반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비율은 10% 미만 불과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6년 통일의식조사 결과

<그림 2>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지속 제기 찬성 비율

## 2. 북한인권법 시행과 관련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지속가능한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 북한인권법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
-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 ① 기본 방향은 우선 인권 개선을 위한 조건 형성과 인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진.
    - 조건 형성은 인권 친화적인 사회경제적 구조와 민주적 질서의 확립을 포함해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을 의미(사회권이 중요할 수 있음)
    - 인권문제 해결은 인권이 침해된 상태를 바로잡는 것을 의미(주로 자유권의 침해 문제로 대두)



- 조건 형성에만 치우칠 경우 당면한 문제해결에 소극적일 수 있고, 문제해결에 치중할 경우 문제의 근원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간과할 가능성

② **자유권의 보호와 사회권의 증진을 통합적으로 추진**

- 이는 인권개선을 위한 조건의 형성과 침해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문제해결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의미
- 한편 평화가 정착되어야 사회적 발전과 민주적 질서 구축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3세대 인권인 평화권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

③ **인권개선의 주체는 북한주민이고 국제사회는 북한주민들의 권리 자각과 요구를 촉진하는 조력자일 수 있음에 유의**

-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선택이 인권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도록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

④ **인권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압박과 관여를 동시에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 북한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동시에 북한사회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도 발전시키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하여 주민인권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면 그에 맞게 다양하고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상도 마련할 필요**

- 한반도 평화정착이나 북한주민의 생활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개발협력사업 등 대북정책의 주요 의제와 사업들도 인센티브로 활용, 인권개선과 남북교류협력의 선순환 가능성을 적극 모색
- 남북협력사업을 북한주민 인권개선에 기여하도록 설계하고 추진하는 인권가치 주류화 및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검토해볼 필요

⑥ **인권문제의 정치화 방지**

- 인권문제를 핵 포기를 위한 압박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거나 북한 내 정치변동을 강압적으로 촉발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양
- 국내 정치적으로도 마치 자유권만이 인권의 전부인양 주장하면서 사회권이나 평화권의 증진과 실현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념적으로 매도하는 행태는 불식



## 토론

## 북한인권법 통과 1년 점검과 앞으로의 과제 토론

한기홍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표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

- 2016년 3월 3일 북한인권법(이하 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동년 9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법이 통과된 지 만 1년을 경과하고 시행령이 9월 2일 제정된 지 6개월이 경과하였다.
- 북한인권법 제정과 시행은 북한인권정책이 법제도적 기반을 통해 정부 차원에서도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그러나 법 시행 6개월을 경과한 현 시점에서 보자면 미흡한 점이 매우 크다. 법 내용 중 시행과 때맞춰 실시되고 있는 부분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대사),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센터)에 대해서는 길게 언급할 부분이 없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한다.
- 대사의 경우 법 시행 한 달 후인 2016년 10월 12일 이정훈 대사가 임명되어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통일부에 설치된 센터도 법 시행 직후인 9월 28일 출범하여 현재 탈북자들에 대한 면접 조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자문위는 법 시행 거의 5개월만인 지난 1월 24일 10명의 위원이 임명되었으나 아직 실질적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추천 5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3인, 국민 의당 추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위의 구성이 늦어진 것은 야당 측의 추천이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추천에 관한 기간을 제약하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기구의 출범이 지연되는 것으로 문제가 크다.

- 재단의 사례는 정당 추천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법 통과 6개월이 다 된 현재의 시점에서도 재단은 구성되지 않고 있다. 구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미 각 5인과 2인의 이사를 추천한 지 오래이나,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사 추천이 진행되지 않아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애초에는 상임직의 배분문제를 둘러싸고 추천이 지연되어 왔으나, 이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더욱 미루어지고 있다. 만일 정권이 교체되면 이사직 배정의 숫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를 기다린다는 비판을 들을 만 하다. 재단의 경우 실제로 법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는 기구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 법이 최초로 발의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여야가 합의해 1표의 반대투표도 없이 통과되어 많은 기대를 자아냈지만,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반쪽자리 시행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를 개선할 실질적 방안은 기다리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본다.

## 토론

## 국회는 언제까지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침묵할 것인가?

안명철 (NK 위치 대표)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주도로 국가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 범죄행위에 대하여 2013년에 호주 대법관인 “마이클 커비”를 위원장으로 한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설립되어 북한주민들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유엔에 보고서를 제출한지 3년이나 지나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총회는 2014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북한 김정은을 포함한 반인도 범죄자들에 대하여 유엔안보리를 통한 국제형사 재판소(ICC)의 제소를 총회 의결로 통과시키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의 일부 상임이사국들의 반대로 인하여 그 실행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그만큼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알고 그 해결 방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어 놓고 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비웃듯이 집권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롯한 수많은 간부들과 주민들을 대공포로 잔인하게 처형하고 그들의 가족 수천 명을 “연좌제”로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시퍼런 대낮에 버젓이 자기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극물로 암살하는 등 반인륜적이고 패륜아적 범죄행위를 자행하여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내의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하여 “자기 고모부와 이복형을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잔인하게 죽이는데 일반 국민들은 더 이상 이야기 할 것도 없다.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을 훨씬 능가하는 광적인 폭군이며 연산군이다”라고 얘기하며 공포와 두려움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떨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듯 태영호 전 영국 공사를 비롯한 북한의 고위층들이 김정은의 행태에 대하여 환멸과 신변의 위협을 느껴 연쇄적으로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 김정은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아적 폭압정치로 인하여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인권 가해자들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북인권단체들의 북한인권 개선과 김정은의 ICC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활동도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의 “NK WATCH”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2016년 12월에 “NK WATCH”가 2013년부터 유엔에 제출한 300건 이상의 유엔청원서와 북한의 답변서를 토대로 김정은을 반인도 범죄자로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였으며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3만 여명의 탈북자들과 북한주민들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적인 포악성보다 더욱 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갖게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20년 전부터 국제사회를 통하여 알려지게 되고 그 해결 방안으로 2013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여 “유엔북한인권보고서”가 제출되고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야 여론에 떠밀려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3월에 겨우 반쪽짜리 이상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2016년 9월 시행령이 발효되었지만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은 해가 지난 2017년 지금 현재까지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국회의 직무유기를 떠나서 2,700만 명의 북한주민들에 대한 모독이고 북한주민의 인권유린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밍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 지점에서는 과연 “이 헌법이 제대로 만들어 졌는가?”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하고 정치인들이 말로는 “평화통일”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고 웨치고 있지만 저희 탈북자들이 눈에는 국회의원들이야 말로 북한 김정은의 눈치와 비유를 맞추면서 자유민주주의적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으로 보여 집니다.

과연 “북한주민은 남의 땅 남의나라 사람인가요?” 라는 서글픈 마음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북한 인권개선에 관하여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북한김정은은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을 독극물 테러를 감행하고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테러와 암살하려는 반인도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헌법기관으로서의 직무유기와 북한주민들의 원망과 자기 밥 그릇 싸움에만 몰두하지 말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여 하루속히 “북한인권재단”설립에 만전을 기여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 ❶ COI리포트 발췌문
- ❷ COI리포트 발췌문(번역본)
- ❸ 북한인권법
- ❹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북한인권법 번역본)
- ❺ 북한인권법 시행령





북한인권 자료집

# 2014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 유엔 총회

배 포: 일 반  
2014년 2월 7일

원문: 영어

### 인권이사회

제25차 회기  
의제 4  
인권이사회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인권 상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 요약

이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담고 있음.\*

\* 보다 상세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A/HRC/25/CRP.1을 참조할 것.

## VII. 결론 및 권고사항

1211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의 정부, 기관 및 당국자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많은 경우 반인도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월권 수준이 아니라 정치 체제의 필수 요소로서, 북한이 주장하는 설립 이상(ideals)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0세기의 정치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정치 조직을 전체주의국가라고 분류하였다. 이러한 국가는 소수의 권력 집단이 권위적인 지배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민들의 생활의 모든 부문을 장악하며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1212 북한은 전체주의국가의 많은 특성을 보인다. 한 개인이 이끄는 일당 통치는 현 최고지도자가 “김일성주의-김정일주의”라고 일컫는 정교한 지도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당국은 유년 시절부터 사상을 주입시키고, 공식 이념에 의심을 품는 모든 정치적·종교적 의견을 억압하며, 주민들의 이동 및 타국민과는 물론 북한 주민들끼리도 소통을 통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러한 지도 이념을 내재화시킨다. 성별과 ‘성분’에 따른 차별을 통해 정치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만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엄격한 사회구조가 유지된다.

1213 식량접근에 대한 북한 당국의 독점은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한 중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식량은 현 정치 체제의 생존에 유용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분배된다. 북한 주민들의 당국에 대한 전적인 식량 의존은 최근 세계 역사상 최악의 기근 사례 중 하나로 이어졌다. 북한 당국자들은 최근 들어서야 시장이 더 이상 완전히 통제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

은 식량권을 실현하는 완전한 개혁이 아닌, 주민들의 굶주림을 불필요하게 야기할 수 밖에 없는 비효율적 경제 생산방식 및 자원의 차별적 분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1214**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은 감시, 강압, 공포, 처벌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어떠한 반대 의견도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정치·안보 기구이다. 공개처형과 정치범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은 북한 주민이 정권에 복종하도록 공포심을 주는 최종 수단이다. 북한 당국의 폭력은 당국 주도의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으로 외부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적 강제실종은 그 강도와 규모와 본질에 있어서 유례가 없는 것이다.

**1215** 오늘날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면에 있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 내부의 점진적인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에 대응하여 북한 당국자들은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체제 전복적인” 악영향을 단속하기 위해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한국 및 기타 외국의 드라마나 영화, 단파 라디오 방송 및 이동 전화로 대표된다. 같은 이유로 북한 정부는 주민들이 탈북하여 자신의 인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과 처벌을 조직적으로 사용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사람들은 대개 고문,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강제낙태 및 기타 여러 형태의 성폭력으로 고통 받는다.

**1216** 조사위원회가 기록한 북한의 오랜, 그리고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 사례들은 국제법상의 반인도범죄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높은 기준에 부합한다.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17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류의 양심에 충격을 주는 범죄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십 년간 추구해 왔다는 사실은 국제공동체의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북한 당국이 자국 주민을 보호하는 데에 명백하게 실패한 만큼, 국제사회는 반인도범죄로부터 북한의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책임은 아직까지 미해결된 6·25전쟁의 유산, 그리고 한반도 분단에 있어 국제사회, 특히 강대국들이 한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러한 불행한 유산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북한의 인권상황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대응책이 왜 지금 절실한지를 알려준다.

1218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과 유엔이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있다. 책임을 규명하는 신속한 조치와 함께, 북한과 인권에 대한 대화를 강화해야 하고, 시민 간 교류를 통해 더 많은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남북한 화해 의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1219 조사결과 및 결론을 바탕으로 조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권고를 하고자 한다.

1220 조사위원회는 북한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a)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조선노동당의 권력에 견제와 균형을 도입하도록 지체 없이 근본적인 정치적·제도적 개혁을 실행한다; 이러한 개혁은 독립되고 공정한 사법부, 다당제,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 및 중앙 차원의 의회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 침해에 관련된 장교단 전체를 조사하고, 조선인민군의 역할을 외부위협으로부터의 국가 방어로 제한함으로써 안보분야를 개혁한다; 국가 안전보위부를 해체하고 사회안전성(현 인민보안부)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감시하에 둔다. 북한의 저명한 사회 인사로 구성된, 독립된 헌법 및 제도 개혁 위원회를 설

립하여 위의 과정을 지도해야 하며, 이러한 위원회는 적합한 국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 (b) 북한은 조사위원회가 동 보고서에 서술한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하여 인권 침해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 및 인권 감시 요원에게 정치범수용소 및 살아남은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모든 정치범수용소를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여야 한다; 추적이 쉽지 않은 모든 실종자들의 행방에 대한 구체사항을 밝혀야 한다.
- (c)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반국가”, “반민족” 범죄라는 애매한 표현을 없애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명시된 공정한 재판 및 적법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제법상 불법인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심문에 대한 금지와 처벌에 관한 북한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규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수감자들이 인간적 조건 하에 있을 수 있도록 일반 수감 체제를 개혁하여야 한다; 연좌제로 보복하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수형자의 가족에 대한 강제이전 관행을 즉각 폐지하여야 한다;
- (d) 사형의 선고 및 집행에 대한 일시 중단을 즉각 선포·실시하며, 추후 사형제 규정 및 집행을 부당한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 (e) 독립적 신문 및 기타 매체의 설립을 허용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대중매체, 국제 통신수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대중 문화를 포함한 외국 방송 및 출판물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활동 및 사상교육 강제 참여를 폐지하여야 한다;
- (f)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는 교육을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적, 인종적 또는 정치적 증오를 부추기거나 전쟁을 선동하는 어떠한 선전이나 교육 활동도 모두 없애야 한다;
- (g) 기독교인 등 모든 종교인들이 처벌, 보복, 감시에 대한 공포 없이 독립적이고 공개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h)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충성도 및 그 가족의 사회·정치적 배경을 근거로 교육 및 취업 등에 있어 차별을 두는 관행을 종식해야 한다; 이웃감시제도(‘인민반’), 기밀 공민등록자료 및 기타 효과적인 사법적, 민주적 관리를 벗어나 정치적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에 대한 모든 감시를 중단하여야 한다; 과거에 했던 광범위한 감시 활동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주민들의 공민등록자료 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 (i) 여성들에게 사회생활 및 구직에서 남성과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해 성평등을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여야 한다; 여성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 법제, 규율, 그리고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가정 폭력, 당국자들 및 국가 기관이 행하는 성폭력 및 성별에 근거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여성 인신매매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이 이러한 인권 침해에 취약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원인에 대처하여야 한다;
- (j) 북한 주민들이 차별 없이 식량권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성과 취약계층, 예컨대 부랑아·노인·장애인의 고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민주적 참여, 선정(good governance) 및 비차별에 기반을 둔 농업·경제·금융 정책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유 시장경제 활동, 대내외 무역,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여타 독립적 경제 행위를 합법화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k) 북한 지도부 및 군부와 보안 기관의 과거 지출에 비추어, 군인을 포함한 주민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 필수적인 최소 기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재정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여 자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 (l) 주민들의 식량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 인도지원 단체들이 효과적 모니터링 등을 위해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도적 지원을 부적절한 목적으로 불법 전용하는 당국자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 (m)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사실상 해외 여행을 금지하는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 불법 월경을 범죄화하지 말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국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국경 지대에서의 사살 명령을 중단하여야 한다;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사람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거나 감금, 처형, 고문, 자의적 구금, 고의적 굶주림, 불법 신체 내부 수색,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성폭력의 피해자로 만드는 것을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국이 강제적으로 거주지와 직장을 정하고 지정된 거주지 외 국내지역으로 여행할 경우 허가증 발급을 요구하는 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 (n) 납치되거나 강제실종된 사람들의 가족들 및 그 출신국에게 그들의 생사 및 (생존 시) 소재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생존자 및 그들의 자손들이 즉시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그들의 가족 및 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망자의 유해를 파악하여 본국으로 송환하여야 한다;
- (o) 주민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방법 등을 통해 이산가

- 족이 상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우편, 전화, 이메일 및 여타의 통신수단 등 감시받지 않는 연락 수단을 즉각 제공하여야 한다;
- (p) 반인도범죄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들을 기소하여 법정에 세워야 한다; 이 과정을 감독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겪었던 인권 침해의 진실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 및 구제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시민 주도 하에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성인 및 아동들에게 인권과 민주적 통치에 대한 국내·국제법과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환기 사법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자문 및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q)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관련 결의안,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UPR)와 인권 협약 기구 및 특별절차 수임자의 보고서에 제기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를 중단하고 인권 우려사항에 대응하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r) 강제실종협약, 장애인권리협약,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지체 없이 비준하여야 한다;
- (s) 위에 언급된 권고사항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기타 유엔 기관들의 현장기반 조직과 기술지원을 즉각 받아들여야 한다.

#### 1221 조사위원회는 중국과 관련국에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 (a)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을 존중하고, 이에 따라 국제 인권 감시 기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확인할 때까지 북한으로 어떠한 북한이탈주민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망명 및 여타 항구적 보호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들이 중국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고, 차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에서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떤 사람과 연락을 취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북한 보안 기관에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국적을 부여하거나 기타 보호를 제공하고자 하는 어떠한 국가와도 자유롭게 외교·영사 접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 (b)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가 동 외교·영사 접촉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완전하고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c) 국제난민법상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인신매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유엔의 기술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 (d) 인신매매에 대한 피해자 중심적이고 인권 기반적인 접근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이 있는 국가에 체류하고, 여기에서 법적 보호 및 교육·직업·의료의 기회 등 해당 국가 시민들과 동등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포함한다;
- (e) 중국 국민과 결혼하거나 아이를 가진 북한의 여성과 남성의 지위를 정규화하여야 한다; 이렇게 태어난 아동들이 중국 국적을 얻고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교육 및 보건 서비스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f) 중국 영토 내에서 북한의 요원들이 납치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속된 납치범들을 기소하고 적절히 처벌하며, 이를 지시한 사람들을 본국으로 인도하여 법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중국 정부는 북한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관료들에게 북한이탈주민 납치, 중국 국적을 받아야 하는 아동 살해, 강제송환된 탈북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 그리고 기타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여야 한다.

**1222** 조사위원회는 남북 주민들이 남북한 화해 의제를 위한 단계별 남북대화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남북대화는 친선 스포츠 경기, 학술·재계 교류, 북한 청년들을 위한 장학 및 직업 실습 사업, 학생 간 교류, 적십자 등 시민 단체 간의 교류, 전문가 및 여성 단체 등의 교류, “자매도시” 관계 수립, 궁극적으로 교통 및 통신망 재건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1223** 조사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해외경험을 접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 및 시민 단체들이 문화, 과학, 스포츠, 선정(good governance), 경제 개발 등 분야에서 인적 대화 및 교류기회를 촉진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과 관련국들은 국제인권법상 관련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 수준으로 여행 및 타국인과의 접촉을 범죄화하는 조치 등 인적 접촉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224 조사위원회는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 재단 및 관련 기업들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한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하고 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각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을 포함한다. 궁극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이러한 재단 및 기업들은 북한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개선, 인권 개선을 위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정부들과 협력하여야 한다.

1225 국제공동체 및 유엔과 관련하여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여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또한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비참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조사위원회는 북한 일반 주민들이나 북한의 경제 전체를 겨냥한 안보리 또는 양자 차원의 제재는 지지하지 않는다;
- (b)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보다 앞서 만들어진 북한에 대한 국별 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는 유엔 사무총장 및 인권최고대표의 정기 보고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의 인권 상황 관련 임무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특히 반인도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임무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c)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는 전적인 지원을 받는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특히 반인도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책임성 규명을 돕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조직은 조사위원회가 이룩한 자료축적 및 증거수집을 바탕으로 설립되어 데이터베이스를 확장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이는 적합한 인력이 배치되어 인권 피해자들 및 증언자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에 기반한 조직이어야 한다. 인권 보고 메커니즘의 업무를 알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기능 외에, 이러한 조직은 유엔이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가해자들을 기소하거나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한다;
- (d)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의 협력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인권 옹호 이니셔티브를 증진시켜야 한다

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주도하는 전략의 이행과 현재 보고서에 설명된 북한의 국제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일관되고 지체 없이 다루기 위해 유엔의 모든 인권 메커니즘을 포괄하는 전략 이행을 지원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 전략의 이행을 위해 모든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e)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 보고서에 명시된 권고 사항들의 이행을 인권이사회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들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f) 유엔 인권이사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사항들로부터 국제사회의 관심이 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너무나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아직까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제공동체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할 책임을 지고 있다;
- (g) 유엔 사무국과 산하기구들은 공동의 “인권 우선(Rights Up Front)” 전략을 조속히 채택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이 보고서에 기록된 인권 사안들을 포함한 인권적 우려들이 모든 북한관련 활동에서 효율적으로 고려되고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은 북한에서 반인도범죄가 재발하거나 지속되지 않도록 이 전략을 즉시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으로 유엔 사무총장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 (h) 북한과 역사적으로 가까운 관계에 있는 나라들, 주요 원조 공여국들 및 잠재적 공여국들, 그리고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도 모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주도할 인권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 (i) 관련국들은 북한에 식량 지원이나 기타 다른 인도적 지원을 경제·정치적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된다. 인도적 지원은 비차별주의를 포함한 국제 인도주의 및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은 오로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만 중단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양자·다자 지원을 하는 당사국들은 북한이 적절한 인도적 접근과 관련 모니터링을 보장하게 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 (j) 북한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의무를 저해하지 않고, 6·25전쟁의 당사자들이었던 유엔과 관련국들은 고위급 정치 회담을 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위급 회담의 참여자들은 합의되는 선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등 유엔 헌장의 원칙 준수를 약속하는 최종적인 전쟁의 평화적 해결 문서를 비준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역내 국가들은 협력을 강화해야 하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선례를 따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Distr.: Restricted  
7 February 2014

English only

---

**Human Rights Council**

**Twenty-fifth session**

Agenda item 4

**Human rights situations that require the Council's attention**

**Report of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mmary*

The present document contains the detailed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ssion's principal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are provided in document A/HRC/25/63.

---

\*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document should be read in conjunction with the repor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HRC/25/63).

GE.14-10871



\* 1 4 1 0 8 7 1 \*

Please recycle 



1209. Responsibility must also be assumed by the United Nations System consisting of Secretariat entities and United Nations agencies. In December 2013, the Secretary-General launched the “Rights up Front” initiative to improve the way the United Nations system addresses situations where populations are at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Rights up Front includes commitments to a more coherent approach to coordination of the United Nations response, and strengthening of dialogue and engagement with the inter-governmental organs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by providing candid information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sup>1685</sup>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arrants the adoption and full implementation of a Rights Up Front strategy on the part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1210.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ve suffered too long.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tect them from the depredations of their own government. The Commission find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discharge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by pursuing a multi-faceted strategy that combines strong accountability measures targeting thos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reinforced human rights engagement with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and support for incremental change based on people-to-people dialogue and an agenda for inter-Korean reconciliation.<sup>1686</sup> The Commission has developed a set of recommend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elaborate on this approach. These recommendations are set out in the Commission’s principal report.

## VII.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1211. Systematic,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and are being, committ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ts institutions and officials. In many instances, the violations of human rights found by the Commission constitute crimes against humanity. These are not mere excesses of the state. They are essential components of a political system that has moved far from the ideals on which it claims to be founded. The gravity, scale and nature of these violations reveal a state that does not have any parallel in the contemporary world. Political scientists of the 20th century characterized this type of political organization as a totalitarian state: A state that does not content itself with ensuring the authoritarian rule of a small group of people, but seeks to dominate every aspect of its citizens’ lives and terrorizes them from within.

1212.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splays many attributes of a totalitarian state: the rule of a single party, led by a single person, is based on an elaborate guiding ideology that its current Supreme Leader refers to as “Kimilsungism-Kimjongilism”. The state seeks to ensure that its citizens internalize this guiding ideology by indoctrinating citizens from childhood, suppressing all political and religious expression that questions the official ideology, and tightly controlling citizens’ physical movement and their means of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and with those in other countrie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gender and songbun is used to maintain a rigid social structure that is less likely to produce challenges to the political system.

<sup>1685</sup> For more details on this initiative see <http://www.un.org/sg/rightsupfront/>.

<sup>1686</sup> See in this regard, the recommendation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mmission’s report, which the Commission set out in accordance with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3/22, read in conjunction with paragraph 31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1213. The state's monopolization of access to food has been used as an important means to enforce political loyalty. The distribution of food has prioritized those who are useful to the survival of the current political system at the expense of those deemed to be expendable. Citizens' complete dependency on the state led to one of the worst cases of famine in recent history. The authorities have only recently come to tolerate the fact that markets can no longer be fully suppressed. However, instead of fully embracing reforms to realize the right to foo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intains a system of inefficient economic production and discriminatory resource allocation that inevitably produces more unnecessary starvation among its citizens.

1214. The keystone to the political system is the vast political and security apparatus that strategically uses surveillance, coercion, fear and punishment to preclude the expression of any dissent. Public execu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 to political prison camps serve as the ultimate means to terrorize the population into submission. The state's violence has been externalized through state-sponsored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of people from other nations. These international enforced disappearances are unique in their intensity, scale and nature.

1215. Toda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inds itself surrounded by a world that is changing rapidly in political, economic and technological terms. These changes offer opportunities for incremental social change within the state. In response, the authorities engage in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so as to crack down on 'subversive' influences from abroad. These influences are symbolized by films and soap operas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short-wave radio broadcasts and foreign mobile telephones. For the same reason, the state systematically uses violence and punishment to deter its citizens from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leave the country. Persons who are forcibly repatriated from China are commonly subjected to torture, arbitrary detention, summary execution, forced abortions and other sexual violence.

1216. A number of long-standing and ongoing patterns of systematic and widespread violations, which were documented by the Commission, meet the high threshold required for proof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international law. The perpetrators enjoy impunit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unwilling to implement its international obligation to prosecute and bring the perpetrators to justice, because those perpetrators act in accordance with State policy.

1217. The fact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has for decades pursued policies involving crimes that shock the conscience of humanity raises questions about the inadequacy of the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cept its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eopl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crimes against humanity, because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as manifestly failed to do so. In particular, this responsibility must be accepted in the light of the role play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by the great powers in particular) in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ecause of the unresolved legacy of the Korean War. These unfortunate legacies help not only to explain the intractabilit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but also why an effective response is now imperative.

1218. The United Nations must ensure that those most responsible for the crimes against humanity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held accountable. Options to achieve this end include a Security Council referral of the situa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by the United Nations. Urgent accountability measures should be combined

with a reinforced human rights dialogue, the promotion of incremental change through more people-to-people contact and an inter-Korean agenda for reconciliation.

1219. On the basis of its findings and conclusions, the Commission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1220. The commission of inquiry recommends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Undertake profound political and institutional reforms without delay to introduce genuine checks and balances upon the powers of the Supreme Leader and the Workers' Party of Korea. Such changes must include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judiciary, a multi-party political system and elected people's assemblies at the local and central level that emerge from genuinely free and fair elections. Reform the security sector by vetting the entire officers' corps for involvement i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by limiting the functions of the Korean People's Army to defending the nation against external threats. Dismantle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and place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under transparent democratic oversight.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reform commission, consisting of respected members of socie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hould be constituted to guide this process and should be assisted by appropriate international experts.

(b)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cluding political prison camps described in the present report. Provid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monitors immediate access to the camps and their surviving victims. Dismantle all political prison camps and release all political prisoners. Clarify with full detail the fate of any disappeared persons who cannot be readily traced.

(c) Reform the Criminal Code and Code of Criminal Procedure to abolish vaguely worded "anti-state" and "anti-people" crimes and to fully enshrine the right to a fair trial and due process guarantees articulated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Enforce existing provisions in the Criminal Code and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at prohibit and criminalize the use of torture and other inhuman means of interrogation that are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Reform the ordinary prison system so as to ensure humane conditions of detention for all inmates deprived of liberty. End the reprisals against persons on the basis of guilt by association. Abolish immediately the practice of forcibly resettling the families of convicted criminals.

(d) Declare and implement an immediate moratorium on the imposition and execution of the death penalty, followed without undue delay by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oth in law and practice.

(e) Allow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newspapers and other media. Allow citizens to freely access the internet, social media,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foreign broadcasts and publications, including the popular culture of other countries. Abolish compulsory participation in mass organizations and indoctrination sessions.

(f) Introduce education to ensure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bolish any propaganda or educational activities that espouse national, racial or political hatred or war propaganda.

(g) Allow Christians and other religious believers to exercise their religion independently and publicly without fear of punishment, reprisal or surveillance.

(h) End discrimination against citizens on the basis of their perceived political loyalty or the socio-political background of their families, including in matters of access to education and employment. Dismantle the neighbourhood watch system (*Inminban*), the secret resident registration file system, and all surveillance of persons and their communications that serve purposes of political oppression and/or are not subject to effective judicial and democratic control. Publicly acknowledge the extent of surveillance practices carried out in the past and provide citizens with access to their resident registration file.

(i) Take immediate measures to ensure gender equality in practice, such as by providing equal access for women in public life and employment. Eradicate discriminatory laws, regulations and practices affecting women. Take measures to address all forms of violence against women, including domestic violence,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by state agents and/or within state institutions. Respond immediately and effectively to trafficking in women. Address the structural causes that make women vulnerable to such violations.

(j) Ensure that citizens can enjoy the right to food and other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out discrimination.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needs of women and vulnerable groups such as street children,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Promote agricultural, economic and financial policies based on democratic participation, good governance, and non-discrimination. Legalize and support free market activities, internal and external trade and other independent economic conduct that provide citizens with livelihoods.

(k) In light of the past expenditures by the leadership, the military and security apparatus, realign priorities and dedicate available resources, as necessary, to ensure freedom from hunger and other essential minimum standards for citizens, including those citizens serving in the armed forces.

(l) Where necessary to ensure the right to food, seek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without delay. Provide international humanitarian organizations with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opulations in need, including for the purposes of effective monitoring. Hold accountable state officials who illegally divert humanitarian aid for improper purposes.

(m) Abolish the de facto prohibition on foreign travel imposed on ordinary citizens. Decriminalize illegal border crossings and introduce border controls that conform to international standards. Renounce orders to shoot and kill at the border. Cease to regard citizens repatriated from China as political criminals or to subject them to imprisonment, execution, torture, arbitrary detention, deliberate starvation, illegal cavity searches, forced abortions and other sexual violence. Abolish the state's compulsory designation of places of residence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requirement to obtain a permit for domestic travel outside a person's designated province.

(n) Provide the families and nations of origin of all persons who have been abducted, or otherwise forcibly disappeared, with full information on their fate and whereabouts if they have survived. Allow those who remain alive, and their descendants, to return immediately to their countries of origin.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ir families and nations of origin, identify and repatriate the physical remains of those who have died.

(o) Allow separated families to unite, including by allowing citizens to travel or emigrate where they choose. Immediately provide such persons with facilities for unmonitored communications by way of mail, telephone, email and any other means of communication.



(p) Prosecute and bring to justice those persons most responsible for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Appoint a special prosecutor to supervise this process. Ensure that victims and their families are provided with adequate, prompt and effective reparation and remedies, including by knowing the truth about the violations that have been suffered. Launch a people-driven process to establish the truth about the violations. Provide adults and children with comprehensive education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 and practice on human rights and democratic governance. Seek international advice and support for transitional justice measures.

(q) Take immediate steps to end all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address the human rights concerns raised in this report, as well as in successiv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procedures of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in the reports of Special Procedures and Treaty Bodies.

(r) Ratify without delay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s) Accept immediately a field-based presence and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other relevant United Nations entities to help implement these recommendations.

1221. The commission of inquiry recommends that China and other States:

(a) Respect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Accordingly, abstain from forcibly repatriating any person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less the treatment there, as verified by international human rights monitors, markedly improves. Extend asylum and other means of durable protection to persons flee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need international protection. Ensure that such persons are fully integrated and du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Stop providing information on activities and contacts of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living in China to the State Security Department and other security agencie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llow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ee access to diplomatic and consular representations of any state that may be willing to extend nationality or other forms of protection to them.

(b) Provide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relevant humanitarian organizations, full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erson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eeking such contact.

(c) Request technical assistance from the United Nations to help meet the obligations imposed under international refugee law and ensure the effective protection of persons from trafficking.

(d) Adopt a victim-centric and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rafficking in persons, including by providing victims with the right to stay in the country and access to legal protection and basic services, such as medical treatment, education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equivalent to those afforded to their own citizens.

(e) Regularize the status of women and men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marry or have a child with a Chinese citizen. Ensure that all such children can realize their rights to birth registration and Chinese nationality where applicable and access to education and healthcare without discrimination.

(f) Take immediate measures to prevent agent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rom carrying out further abductions from Chinese territory. Prosecute and adequately punish apprehended perpetrators of abduction and demand the extradition of those giving such orders so that they may be tried in accordance with law. China should raise with the Supreme Leader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high-level authorities the issues of abductions, the infanticide of children entitled to Chinese nationality, forced abortions imposed on repatriated women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target persons repatriated from China.

1222. The Commission recommends that the Korean People foster Inter-Korean dialogue in a phased approach leading up to an Agenda for Reconciliation. Inter-Korean dialogue could be furthered through such initiatives as friendly sporting events; academic and business interactions; scholarships and apprenticeships for young people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tudent exchanges; exchanges betwee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cluding national Red Cross Societies; contacts between professional organizations and women's groups; the development of "sister city" relationships and, eventually, the reestablishment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 links.

1223. Stat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hould foster opportunities for people-to-people dialogue and contact in such areas as culture, science, sports, good govern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provide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ith opportunities to exchange information and be exposed to experiences outside their home countr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other states should remove applicable obstacles to people-to-people contact, including measures that criminalize travel and contact to the extent that these are not in accordance with relevant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1224. States, foundations and engaged business enterprises should provide more support for the work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efforts to docum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broadcast accessible information into each country. Eventually, and once conditions are deemed to be appropriate, such foundations and enterprises should join forces with concerned Governments to coordinate efforts to adopt a coherent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creation of livelihoods for the population and the advance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1225. With regar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United Nations, the Commission make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 The Security Council should refer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for action in accordance with that court's jurisdiction. The Security Council should also adopt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ppear to b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light of the dire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of the general population, the Commission does not support sanctions imposed by the Security Council or introduced bilaterally that are targeted against the population or the economy as a whole.

(b)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should extend the country-specific human rights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at pre-date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These include the periodic reports of the Secretary-General and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s well as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ch mechanisms should be mandated to focus on ensuring accountability, in particular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should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c)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ith full support from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General Assembly, should establish a structure to help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where such violations amount to crimes against humanity. The structure should build on the collection of evidence and documentation work of the Commission, and further expand its database. It should be field-based, supported by adequate personnel deployed to the region so as to enjoy sustained access to victims and witnesses. In addition to informing the work of human rights reporting mechanisms and serving as a secure archive for information provided by relevant stakeholders, the work of such a structure should facilitate United Nations efforts to prosecute, or otherwise render accountable, those most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d)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ould continue the OHCHR's engagemen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and enhancing advocacy initiatives.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should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a strategy led by the Special Rapporteur and involving all concerned human rights mechanism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o address, coherently and without delay, the special issue of international abduction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and related matters described in this report. Member States should afford full cooperation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such a strategy.

(e) The High Commissioner should periodically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other appropriate United Nations organs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Commission's report.

(f) The Human Rights Council should ensure that the conclusions and recommendations of the Commission do not pass from the active atten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here so much suffering has occurred, and is still occurring, action is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g) The United Nations Secretariat and agencies should urgently adopt and implement a common "Rights up Front" strategy to ensure that all engagement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ffectively takes into account, and addresses, human rights concerns including those collected in this report. The United Nations should immediately apply this strategy to help prevent the recurrence or continu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strategy should contemplate the possibility of the Secretary-General referring the situation to the Security Council.

(h) States that have historically friendly ties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ajor donors and potential donors, as well as those states already engaged wit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framework of the Six-Party Talks, should form a human rights contact group to raise concerns abou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provide support for initiatives to improve the situation.

(i) States should not use the provision of food and other essential humanitarian assistance to impose economic or political pressure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Humanitarian assistance should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principles, including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id should only be curbed to the extent that unimpeded

international humanitarian access and related monitoring is not adequately guaranteed. Bilateral and multilateral providers of assistance should coordinate their efforts to ensure that adequate conditions of humanitarian access and related monitoring are provid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 Without prejudice to all the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st immediately implement, the United Nations and the states that were parties to the Korean War should take steps to convene a high-level political conference. Participants in that conference should consider and, if agreed, ratify a final peaceful settlement of the war that commits all parties to the principles of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States of the region should intensify their cooperation and consider following such examples as the Helsinki Process.

---

[시행 2016.9.4.] [법률 제14070호, 2016.3.3., 제정]

# 북한인권법

통일부(북한인권과) 02-2100-2316

**제1조(목적)**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북한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며 이 지역에 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국회 추천 인사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국회가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

2.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3. 그 밖에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① 정부는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남북인권대화의 대표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준용한다.

③ 그 밖에 남북인권대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인도적 지원)**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引渡)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2.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 국가는 민간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하여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 ① 국가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인적교류·정보교환 등과 관련하여 국제기구·국제단체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하며, 북한인권증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담당기구를 둘 수 있다.

1. 남북인권대화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나. 남북인권대화 등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2.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북한 내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다.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접수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지도·감독, 기탁금품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재단 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며, 이사는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인사 2명과 국회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하되, 국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가 2분의 1씩 동수로 추천하여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 ② 이사장과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재단 임원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북한인권기록센터)** 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를 둔다.
- ② 기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 등을 담당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하고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기록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⑤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는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하며, 북한인권기록 관련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담당기구를 둔다.
- ⑥ 그 밖에 기록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공공단체, 관련 인사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진술, 그 밖에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 관련 인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 및 조례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국회 보고)** ①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의 보고 이외에도 매년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인권 실태
  2.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3. 국군포로 및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 상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각각 수행한 사업 내역과 시행결과 및 평가
  5. 그 밖에 북한인권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② 국회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고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17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4070호, 2016.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nforcement Date 04. Sep, 2016.] [Act No.14070, 03. Mar, 2016., New Enactment]

법령, 판례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검색 OK !

##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통일부 (북한인권과) 02-2100-2316

## Article 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by pursuing the right to liberty and right to life prescrib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othe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human rights.

Article 2 (Basic Principles and Obligations of the State) (1) The State shall affirm that North Koreans have dignity and worth as human being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shall endeavor to protect and promote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In addition to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tate shall also endeavor to establis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3) The State shall prepare sustainable and stable finances necessary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Article 3 (Definition)

The term "North Koreans" in this Act means persons who have their domicil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spouse, workplace, and other bases of living north of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 Article 4 (Relationship with Other Acts)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Act, and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effort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shall be governed by this Act.

Article 5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1) In order to provide advice on policies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North Korean Human Rights Advisory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2) The Committee shall be comprised of not more than ten member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cluding chairperson; and the chairperson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its members.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commends Committee members, the negotiating body of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the President currently belongs or formerly belonged and, the other negotiating bodies, shall recommend one half of the members, respectively, an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commission such members.

(3)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6 (Master Plans and Action Plans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 Every three years,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formulate a master plan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the following matt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ster plan") after obtaining advice from the Committee and consultation with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1. Investigation into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Plans for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inter-Korean human rights dialogue and humanitarian assistance;
3.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relating to the protection and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Each year,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formulate an action plan to improv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ion plan") based on the relevant master plan, after obtaining advice from the Committee.

(3) Upon formulating a master plan or an action pla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report it to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Article 7 (Promotion of Inter-Korean Dialogue on Human Rights) (1) The Government shall promote inter-Korean human rights dialogue on important matters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Article 15 of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matters necessary to appoint the representatives for inter-Korean dialogue on human rights.

(3) Other matters necessary to promote inter-Korean dialogue on human righ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8 (Humanitarian Assistance) (1) In providing North Korean authorities or agencies with any humanitarian assistance for North Koreans to promot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following matters are complied with:

1. Assistance shall be delivered transparentl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delivery standards;
2. Assistance shall be provided preferentially for vulnerable social groups, such as pregnant women and infants.

(2) The State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re also complied with in delivery of humanitarian assistance by private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tc.

Article 9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 The State shall cooperat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national bodies, foreign governments, etc. in implementing human exchanges and the exchange of information, etc.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shall also endeavor to rai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awareness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In order to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under paragraph (1), an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maybe appointed withi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3)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duties, qualifications, etc. of the Ambassado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0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1) In order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u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to engage in research, policy development, etc.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inter-Korean dialogue on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assistance,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undation").

(2) The Foundation shall be a corporation and duly formed upon completion of registration for its incorporation at the seat of its principal office.

(3) The Foundation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and may have separate organs assigned to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1. Each of the following,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inter-Korean dialogue on human rights:
  - (a) Investigation and research into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 (b) Development of alternative policies and provision of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for inter-Korean human rights dialogue, etc.;
  - (c) Other functions deliberated on by the Committee and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d) Provision of assistance to civil groups necessary to implement any program described in items (a) through (c);
2. Each of the following,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ncluding humanitarian assistance:
  - (a) Investigation and research into demand for humanitarian assistance in North Korea;
  - (b) Development of alternative policies and provision of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 (c) Other functions deliberated on by the Committee and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 (d) Provision of assistance to civil groups necessary to implement any program described in

items (a) through (c).

(4) Other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the Found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1 (Operation of Foundation) (1) The Foundation shall be operated with the following finances:

1. Contributions from the Government;
2. Other revenues.

(2) Notwithstanding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5 (2) of the Act on Collection and Use of Donations, the Foundation may receive money and other valuables donated voluntarily, upo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Unification,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its purposes of use.

(3)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Foundation.

(4) If necessary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Foundatio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gencies to dispatch public officials under their authority to the Foundation.

(5) Except as otherwise expressly provided for in this Act, the provisions on incorporated foundations in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Foundation.

(6) Other necessary matters relating to the operation, guidance, supervision, procedures for receiving donation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2 (Composition of Board of Foundation) (1) The Foundation shall have not more than 12 directors, including one chief director, and among whom two persons shall be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the remainder by the National Assembly; when the National Assembly recommends directors, the negotiating body of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the President currently belongs or formerly belonged, and the other negotiating bodies, shall recommend one half of the members, respectively, and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appoint such directors.

(2) Executive officers, other than the chief director and full-time directors prescrib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shall be non-standing.

(3) The chief director shall be elected by and from among directors, and the term of office of the chief director and directors shall be three years, which may be renewed only once: Provided, That the term of office of ex officio directors shall coincide with the term during which he/she holds his/her official position.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composition and management, etc. of the board of the Found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3 (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 In order to collect and record information on the status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a Center for Investigation and Documentatio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enter") in the Ministry of Unification.

(2) The Center shall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and shall be assigned to collect, research,

preserve, publish, or otherwise deal with various kinds of materials and information:

1. Investigation and research into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Functions relating to the Korean War prisoners detained in North Korea, abductees in North Korea, and separated families;
3. Other functions deliberated on by the Committee and acknowledg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s necessary.

(3) Any of the functions prescribed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2) may be outsourced to outside institutions. In such cases, subsidies may be granted to cover necessary expenses, within budgetary limits.

(4) The Center shall have one head,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from among public officials belonging to the Senior Civil Service Corps or persons with profound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

(5) Materials collected and recorded by the Center shall be transferr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every three months, and the Ministry of Justice shall establish an organ assigned to preserve and manage the materials related to record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operation, etc. of the Center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ticle 14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etc.) (1) The Minister of Unification may request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public organizations, and relevant persons to submit materials, state opinions, or provide cooperation for other matters necessary for policy implementation.

(2)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public organization, or relevant person in receipt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3) The head of any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enact or amend any statute, municipal ordinance, etc. that provides for affairs prescribed in this Act, shall pre-notif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thereof.

Article 15 (Reports to National Assembly) (1) Each year, in addition to a master plan and an action pla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report the following matters,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to the National Assembly, prior to the opening of its regular session:

1. Status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 Results and progress of improving human rights in North Korea;
3. Status of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lans for repatriation of Korean War prisoners detained in North Korea and abductees in North Korea,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etc.;
4. Results of projects implemented respectively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ffairs prescribed in subparagraphs 1 through 3, and the assessment thereof;
5. Other matters acknowledg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s necessary to improve human rights in Korea.

(2) If necessary, the National Assembly may recommend that the Government correct or improve any report made under paragraph (1).

Article 16 (Deeming of Public Officials in Application of Penal Provisions)

Executive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Foundation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the penal provisions of Articles 127 and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performed under this Act.

Article 17 (Penal Provisions)

A person in receipt of any subsidy under this Act by fraudulent or other illegal mea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ADDENDA <No. 14070, 03. Mar, 2016>

Article 1 (Enforcement Date)

This Act shall enter into force six months after the date of its promulgation.

Article 2 (Prepar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Foundation)

(1) In order to process the administrative affai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hall commission not more than seven promoters of the Found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this Act is promulgated.

(2) Promoters shall draft the 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Foundation, obtain approval thereof from the Minister of Unification, and jointly file for registr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Foundation.

(3) Upon completing registration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Foundation, the promoters shall transfer the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chief director of the Foundation without delay, and shall be deemed discharged upon completion of such transfer.

(4) Expenses incurred in incorporating the Foundation shall be borne by the State.

[시행 2016.9.4.] [대통령령 제27476호, 2016.9.2., 제정]

## 북한인권법 시행령

통일부(북한인권과) 02-2100-2316

**제1조(목적)** 이 영은 「북한인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북한인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이하 “북한인권증진”이라 한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회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다. 국제기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을 추천한 국회 교섭단체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소위원회 및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위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위원회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전문위원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평가
2.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3.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의 세부과제와 추진방법
4.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
5.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연구 지원
6. 북한주민의 인권과 관련된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민사회단체를 말한다)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7.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남북인권대화의 추진)** 통일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화와 교류를 촉진하고, 이를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도적 지원)**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으로 한다.

1. 북한주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북한주민에게 발생한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 지원의 절차 또는 구체적인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이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라 한다)는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국제적 협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②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2.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재단의 정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재단 사무에 관한 사항



5.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재단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재단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절차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재단 내부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단의 조직 구성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출연금 교부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면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출연금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연금의 교부 및 집행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재단의 지도·감독)**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일부장관은 재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기탁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재단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체신관서(遞信官署) 또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접수하고, 즉시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탁하거나 기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기탁금품을 접수하면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기탁자가 기탁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자의 동의를 받아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기탁금품을 기탁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경우

④ 재단은 반기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을 매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단은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과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탁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재단은 전년도 기탁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업 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자가 본인의 성명 및 기탁금의 사용용도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재단 감사의 임명 등)** ① 재단에 감사 1명을 두며, 감사는 통일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재단의 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북한인권증진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공무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북한인권증진 관련 활동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④ 통일부장관은 국회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직접 경험하였는지 여부 및 성별을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임원이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임원을 해임(解任)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재단의 임원을 해임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⑦ 통일부장관은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기록센터의 운영)**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센터(이하 “기록센터”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 수집 목적으로 관계인의 진술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문답서(問答書)에 기록하여야 하며, 문답서 끝 부분에 해당 관계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술 내용이 복잡하거나 해당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기록센터 소속 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의 진술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와 그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인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진술 과정을 녹화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록센터에서 수집·기록한 자료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자료의 원본을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 ④ 통일부장관은 기록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북한인권기록보존소)**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무부에 두는 담당기구의 명칭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이관받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이관받은 자료(이하 “이관자료”라 한다)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업무
3. 그 밖에 이관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법무부장관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북한인권실태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북한주민의 인권 기록 등을 위한 협의체)**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또는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통일부장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과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의 수집·기록 업무
2. 법무부장관: 이관자료의 보존·관리 업무

부칙 <제27476호, 2016.9.2.>

이 영은 201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 MEMO

## MEMO